

경제 정책 하면

나라경제

9

2011
nara.kdi.re.kr

특집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젠 개최에 총력!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집중토론
경력단절 여성,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이달의 이슈

소비자의 힘으로 고물가 파고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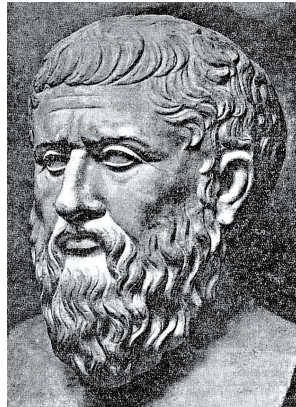
정의에 대한 성찰

플라톤, 「국가」

책의 이름은 보통 그 책의 주제를 집약한다. 그러나 모든 책의 제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플라톤의 「국가」가 그렇다. 이 제목 자체는 그것이 원래의 그리스어(politeia, 정치체제)이든 변용된 라틴어(res publica, 국가)이든 간에 다루는 주제가 「정치학」에 관한 것임을 함축한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내용이 정치(학)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정치에 관한 주제로부터 「국가」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람들과 지극히 일상적인 주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부유한 노인 케팔로스와 함께 '죽음을 앞둔 노령기에 재물이 주는 이로운 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며, 이 대화는 그의 아들 폴레마르코스에 의해 계승돼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라는 주제로 옮겨가게 된다. 이후 대화는 보다 지적으로 준비된 사람들—트라시마코스, 아데이만토스, 글라우콘—에 의해 계승되고 대화 수준도 상승한다. 대화 수준의 상승과 함께 주제도 성격 변모를 하게 된다. 즉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윤리적 주제는 최초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고 좋은 나라는 어떤 것이라는 정치학적인 주제로 옮겨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요 관심사는 정의(正義)의 정의(定義)인가, 아니면 국가—최초의 국가이든, 좋은 국가이든—를 만드는 문제인가? 답은 그 둘은 하나로 섞인다는 것이다. 정의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는 동일한 하나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이다. 정의는 국가를 이루는 질서이고, 국가는 정의 자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가시적 구현물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둘 중 하나는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이다. 혹은 헤겔 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의는 이상이고 국가는 그것의 현실이다.



플라톤의 「국가」가 논하는 정의는 정치학적인 원리 이상의 것이다. 정의는 타자와의 관계를 결정짓기 이전에 나 자신의 무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전 인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법」이다.

하지만 「국가」가 논하는 정의는 정치학적인 원리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그 정의는 내가 타인에게 해악만 끼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립되는 것(소극적 정의)도 아니고, '나의 것은 나의 것, 너의 것은 너의 것'이라는 분배의 원칙(분배적 정의)도 아니다. 정의는 타자와의 관계를 결정짓기 이전에 나 자신의 무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전 인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치학적 메타포로 표현하자면 정의는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법」이다.

그런데 정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지배해야 하는가? 좋음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그와 함께 나의 삶 전체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는 타자를 혹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다. 도덕성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나의 삶이 '좋은' 삶이 된다.

그러므로 좋음에 관한 물음이 핵심 문제로 부각된다. 어떤 것이 좋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가」는 이 좋음의 문제를 모든 방향에서 그리고 모든 주제들과 같이 엮어 논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유머, 아이러니, 비유, 신화적 상상, 드라마적 파위와 한데 섞여 진행된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협주곡을 듣는 것과 같다. 나라 정재



이창우

기독교대 철학과 교수

1965년생. 독일 에어랑겐-뉘른베르크대 철학박사.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철학과 초빙교수 역임. 저·역서에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동서양철학콘서트」 등이 있다.



특집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젠 개최에 총력!

14 “과잉투자 안 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
최문순 강원도지사

18 평창 동계올림픽, 일류국가로 가는 결정적 돌파구
서대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0 역대 최고 올림픽 개최 위해 최선 다할 것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24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모델 제시할 것
김영훈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26 경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해야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8 평창을 아시아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자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30 탄소 제로를 넘어 ‘O₂ 플러스’ 올림픽으로
엄기증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32 한국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기틀’ 마련하자
김미숙 체육과학연구원 박사

인터뷰

08 “보금자리주택, ‘건강한 사회’ 만드는 시금석 돼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경제정책해설

50 페루, 칠레에 이은 두 번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홍승인 외교통상부 FTA무역규범과장

52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상인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54 녹색생활의 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한다!
이영기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56 ‘고용영향평가’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한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58 2020년 5GB 파일이 4초면 다운로드 끝!
신홍순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통신망팀 사무관

특별기고

46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꿈꾸며
진용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집중토론

- 42** 경력단절 여성,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김은정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정책센터장

세계는 지금

- 34** 절반의 성공에 그친 IEA 비축유 방출
 김기준 주OECD대표부 참사관
- 37** 러시아, 대형 국영기업 민영화 적극 추진
 김희중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차장

연중기획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 82** “사회적기업으로서 첫 상장하는 기업 되고파”
 박상덕 메자니아이팩(사터민 사회적기업) 대표
- 84** “지금 만드시는 게 ‘제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이경숙 이로운넷 공동대표

정책 그 후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

- 86** 신뢰와 안전의 또 다른 이름 ‘에스크로’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87** “5만원 이상 구매부터 안전장치 가동”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88** “배송 이후 교환·반품·환불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을”
 황호연 이베이코리아 CE팀 차장
- 89** 영세업체들이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들은 바쁘다

- 62**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일자리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내일’을!
 한은숙 사무관

이달의 이슈

소비자의 힘으로 고물가 파고 넘는다

- 67** 물가전쟁, 소비자는 방관 중
 조민근 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자
- 68** ‘똑똑한 소비자’를 넘어 ‘현명한 소비자’로
 오장균 한국소비자교육원 이사
- 70** 주유소 사은품 ‘공짜’ 아니다
 김지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71** “내 별명이 ‘홈파티의 여왕’입니다”
 추효경 주부
- 72** 사고 있는 ‘통신 꼭지’를 잠그자
 이호준 전자신문 정보통신팀 차장
- 73** 최저가 미끼 인터넷쇼핑몰 주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74** 소비자피해요? ‘1372’가 가장 빠릅니다
 이병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 76** 美 『컨슈머리포트』 상품선택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 78** 고물가, 소비자 주권의식으로 해결하자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 80** ‘오피넷’은 알겠는데, ‘T-프라이스’는 뭐지?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칼럼

- 03 천천히 읽기**
정의에 대한 성찰 - 「국가」
이창우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 40 나라 밖 경제**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는 신용평가사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 41 외신이 본 한국경제**
대외충격에 민감한 한국 증시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60 나라경제 인사이트**
복수노조 시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65 유정아의 소통의 기술**
그 사람의 하루
유정아 방송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위원
- 81 미래와 세상**
외등이는 외롭다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회장
- 90 It's App**
“손안에 유치원이 들어왔다”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 91 행복한 중소기업 - (주)미래테크**
그린산업으로 미래를 연다
오기철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부장
- 92 수수께끼 서양미술사**
장 프랑수아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 94 그길을 걸었다 - 경기도 남양주**
눈 속에 강물을 담고 걷다
이용한 작가
- 98 시평**
전국공약(空約) 대 지역공약(恐約)
조원동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11. 9 [제22권 9호 통권 250호]

| | |
|----------------|---------------------------------------------------------------------------------------------------------------------------------------------------------------------------------------------------------------------------------------------------------------------------------------------------------|
| 발행 | KDI 경제정보센터 |
| 편집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 발행인 | 현오석 KDI 원장 |
| 편집인 | 박철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 편집주간 |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
| 편집위원 | 기획재정부 신민식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이근재 기초과학정책과장 외교통상부 김영준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변성완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박상호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서성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최중균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김영훈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윤성원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진홍 정책홍보팀장 |
| 편집간사 | 이진민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
| 편집장 | 이재열 |
| 취재·편집기자 |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신지원 |
| 배포 | 김경숙 |
| 발행처 |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9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
| 전화 | 02-958-4656 |
| 팩스 | 02-3295-0744 |
| 홈페이지 | http://nara.kdi.re.kr |
| e-mail | nara@kdi.re.kr |
| 발행일 | 2011년 8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2권 9호(통권 250호) |
| 등록일 |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
| 기사 문의 | 02-958-4634 |
| 광고 문의 |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
| 구독료 |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
| 제작지원·인쇄 | (주)성우에드컴 |
| 사진 | 이래스튜디오 |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린을 꺼내세요

당신의 녹색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합니다



그린카드는 녹색생활 실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시 포인트지급



녹색소비
환경마크·
탄소라벨링제품
구매시 포인트 지급



공공부문합인
휴양림 무료입장,
국립공원합인,
공연 합인 등



신용카드의 기능
대중교통 이용특화
100~200
포인트적립

그린카드 신청

7월 중순부터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 BC카드(우리은행, 하나SK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KB국민카드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카드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1963년 경북 의성 생
 서울대 토목공학, 미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1978년 5월 국세청 행정사무관(행시 2회)
 1994년 8월 건설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장
 1996년 4월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장
 2000년 8월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관
 2003년 7월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2004년 1월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2005년 1월 건설교통부 차관보
 2007년 7월 한국도로공사 사장
 2008년 3월 국토해양부 제1차관
 2011년 5월~현재 국토해양부 장관

“보금자리주택,
 ‘건강한 사회’ 만드는 시금석 돼야”

때 _ 2011년 8월 18일 오후 3시

곳 _ 장관 집무실(과천 정부종합청사)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취임 3개월이 다가오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

그동안 4대강, 주택, 건설, KTX, 마리나 등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이 바쁘게 지나갔다. 토요일은 거의 현장엘 다녔고, 일요일에는 회의를 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편의와 안전, 주택 문제를 다루다 보니 어깨가 무겁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하루도 맘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던 것 같다. 한번은 도무지 피곤해서 토요일 하루를 제낀 적도 있다.(웃음) 지난주 휴가를 내 취임 이후 거의 못 뵈던 어머니를 찾아 몇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왔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비가 안 온 날이 3일이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맞다. 이번 여름은 완전히 빗속에 묻혀 지낸 것 같다. 정말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 그런데 우리 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4대강 살리기이지 않은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비는 그런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음을 입증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반대하는 보도도 많았고,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지 않나. 같은 양의 비를 비교했을 때 예년에 비해 1/10 정도밖에 피해가 없었다. 4대강 지류나 인근에 사는 분들이 과거 같으면 침수 피해가 많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다들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여론이 확 바뀌었다. 또한 공사 중에 비가 내려 사업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알게 됐다. 완벽하게 보 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다. 요컨대 물난리와 같은 사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지만, 4대강 사업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번 비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적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장마 기간 동안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mm로 예년의 2.5배,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는 예년보다 3.5배 많았다. 그러나 그동안 4대강 준설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4대강 본류의 주요 지점별 수위는 오히려 2~4m가량 낮아졌다. 실제 한강(여주) 2.54m, 낙동강(상주) 3.78m, 금강(연기) 3.36m 정도 수위가 내려갔다. 여주 이포보에 가면 그 위에 한 60만평 정도 저류지를 만들어 놨다. 그곳은 상습 침수지역이었는데, 이번엔 침수가 전혀 없었다. 또 함안·함천·고령·달성·칠곡·영주·문경에서도 침수 피해는 없었다. 준설로 인해 물의 높이(水頭)가 높아져 유속이 빨라졌고, 그 결과 물이 빨리 빠져 침수가 안 된 거다. 여기에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내려가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예년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 1조4천억원~5천억원가량 피해가 났었지만, 올해에는 한 1천억원 정도로 피해가 적었다. 4대강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큰일날 뻔했다. 하하.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국민들은 언제쯤 4대강을 거닐며 여가를 즐길 수 있을까?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79%에 이른다. 본류는 87%, 보는 98%다. 세종시 금강변은 이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다. 부산 화명지구엔 서울 한강 둔치와 같이 놀이시설·녹지 등이 조성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9월쯤 되면 많은 지역이 개방이 가능할 거고, 10월 말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다. 즉 4대강 사업 중 보, 경관거점 등 주요 지점은 10월에 완료해 개방하고, 본류 사업 대부분은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4대강에서 각종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주 일부 구간만 내년 2~3월까지 늦어질 것 같다. 『나라경제』도 시간 되시면 여주 이포보 같은 데를 찾아 르포 기사 한번 내는 게 어떨까. 적극 도와드릴게.(웃음)

그렇지만 4대강 살리기가 환경파괴 사업이라는 목소리는 좀처럼 찾아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이뤄지는 일부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생태계 현상에 초점을 두어 논란을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은 생태계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의 폭을

Interview

키워 수량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보를 만들면 수중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다. 수변은 어떤가. 과거에는 대부분이 경작지였던 것이 자연 생태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강의 생태와 연계돼 주변의 습지나 수변생태계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거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이 더 풍부해지고,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던 것을 잔디밭이나 풀밭으로 만들면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나. 지난해 금강에 가 보니 고라니가 돌아다니더라. 물론 강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픔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을 통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생태계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지난여름 물난리를 겪으면서 이상기후 시대에 맞는 장기적 수해방지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수해대책 주무부처 중 하나인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발해짐에 따라 현 수준의 대응체제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이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 부로서는 하천제방 등 각종 시설기준을 높이고, 도시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영향성 검토를 강화할 것이다. 제방의 경우 지방하천도 주요 도시구간은 국가하천 수준(100~200년 빈도의 집중강우)으로 설계기준을 상향 적용하려 한다. 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해취약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위험지역은 가능한 개발용지에서 제외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재해예방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주택시장 문제가 좀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주택정책의 큰 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택의 양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고, 주택의 질도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주택 공급이나 질 부분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 맡겨 놓았을 경우 일정 수준의 주거 복지

를 누릴 수 없는 분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좀 더싼 가격에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 즉 이를 합쳐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이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에서 기업들에 의해 주택의 질 개선이나 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수급과 거래에 관련된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토지가 매우 조촐하고 계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늦은 결혼과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주로 4인 가구에 맞춰진 우리 주택정책도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동감이다. 일단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서는 시장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원룸·다세대·다가구 주택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예년 평균의 배 이상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고령화와 관련해 살 펴볼 수 있는데, 일단 집 자체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즉 무(無)장애 주택 쪽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은 집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들이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에 가깝게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이는 기존 도시 안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병원·쇼핑몰·운동시설 등이 완벽하게 구비된 공간을 만드는 것, 곧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은 내 신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던가.(웃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력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거나 주거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이 바로 그런 것이다. 다만 과거 정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25~30%는 민영주택, 70~75%는 보금자리로 공급된다. 거기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다. 결과적으로 단지 전체에 여러 계층이 혼재돼 사는, 소셜 믹스가 이뤄진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이처럼 계층 간 장벽이 없어야 한다.”



예전에는 국민임대와 같은 임대주택만 지었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전체 150만호 중 70만호는 분양주택이고 80만호는 임대주택이란 점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아파트 단지 한 곳을 개발하면 25~30%는 순수 민영주택, 남은 70~75%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거기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 단지는 단지 전체에 여러 계층이 혼재돼 사는, 소셜 믹스(Social Mix)가 이뤄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계층 간 장벽이 없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혹자는 임대만 하지 분양은 왜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주거 안정이나 주거 복지 측면에서는 자기 집을 가진 세대가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양을 받게 되면 임대주택일 때보다 집 관리부터 더 잘하게 된다.

그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예정된 지

역에서 땅주인·현지주민·지자체가 모두 반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싼 주택이 공급돼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지. 정부로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총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올해 공급물량을 당초 21만호에서 15만호로 줄이고, 시장의 다른 주택과 영역이 오버랩되지 않도록 평수도 축소하는 등 정책 조정을 했다. 설득 과정도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득상위계층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러 계층이 같이 어울려서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왜 필요한가?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인천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매각 대금을 공항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Interview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분매각 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및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일각에선 민영화로 오해해 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특정 외국계 기업이 특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부가 51% 지분을 보유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공개매각하는 만큼 헐값매각, 졸속매각, 공공성 약화 등의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 정부로서 지분매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엔 주력할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건설 분야 전문 관료로서 장관의 국토관리 기본철학은 무엇인가?

우리 국토는 그간 경제 발전의 공간적 토대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공간으로서의 품격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품격, 사람과 공간이 움직이는 제도의 품격, 이 세 가지 품격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각 지역이 개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고, 도로·철도·주택·수자원·항공 등 SOC를 효율적으로 확충·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Needs)와 창의적인 비전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국토 관련 각종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평택의 한 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부 장관에 오르기까지 가슴속에 굳게 지켜온 원칙이 있다면?

하하. 뭐 그렇게 특별한 좌우명을 가지고 있진 않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다만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살려고 했다. 각 사안마다, 각 순간마다 공직자답게 처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수도 많이 했다. 모자란 점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공직자답게 처신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공직자는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아야겠지. 가치를 조정해 주는 역할이 많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의 편의를—최종적으로는 그게 행복이 될지도 모르겠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아파트단지 침수피해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돕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데—증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걸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나 국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사회가 계층, 지역으로 나뉘어 자신과, 자신의 지역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다.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촌이 다 같이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미국이나 유럽, 혹은 아프리카 경제가 잘못돼도 한국경제는 바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발전하고 살아가려면 우선 국내에서부터 지역 간, 계층 간에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간 국토부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성과도 내 왔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을 완전히 탈피하고, 성과를 내는 만큼 제대로 평가받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국민들께서는 눈앞의 단기적인 성과만을 보시기보다는 장기적 시각으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우리 국토해양부 전 직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로 이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토해양부 장관 인터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젠 개최에 총력!

12년간 절치부심한 끝에 드디어 평창이 해냈다.

온 나라 온 국민이 함께 이뤘다.

이젠 7년 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는 문화·환경·경제올림픽을 모토로 한 5대 전략을 마련했고,

전문가들 사이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언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가 그려나갈 '새로운 지평선'(New Horizons)은 어떤 모습일까.

『나라경제』가 살펴본다.



“과잉투자 안 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

최문순 강원도지사

얼마 전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 기간 중 평창 동계올림픽 유
치가 가장 큰 일이 아니었나 싶
은데….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 국민들과 도민들께서 무척
기뻐하신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의 병목에 막혀 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것을 뚫고 나
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
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은 하계
올림픽과 달리 선진국으로 가는
진입문으로 인식된다. 역대 동
계올림픽을 치른 나라들은 모두
다 선진국이었다. 우리에게도
평창 올림픽은 선진국으로 진입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
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대회 유치에 강원도민들의 전폭
적 지지가 큰 힘이 된 것으로 알
려졌다. 이처럼 도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염원한 이유가 무엇이라
고 생각하나?**

강원도는 지역의 1인당 소득



1966년 강원도 춘천 생
MBC 보도국 사회부 기동취재반 기자
전국언론노조(산별) 총대위원장
제1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MBC 사장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현 강원도지사

이 1만5천달러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 도로 등 모든 인프라가 다 뒤쳐져 있다. 인구도 계속 줄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서 고령화도 심각하다. 거기다 남북관계는 막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강원도를 에워싸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활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흑자·민생·환경·균형·평화올림픽이란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흑자올림픽이라고 생각한다. 동계올림픽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더 나빠진 나라들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조를 흑자올림픽으로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민생올림픽이다. 짧은 올림픽 기간 동안 엘리트 선수들이 와서 경기하고 축제하고 휩 떠나고 가면 대부분 남은 사람들은 막대한 시설유지비, 시설투자에 대한 이자 등에 허덕이게 된다. 강원도가 그렇게 돼선 안 된다. 올림픽이 도민들의 삶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민생올림픽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세 번째는 환경올림픽이다. 강원도는 무엇보다 환경이 생명인 지역인 만큼 환경을 우선하는 올림픽이 돼야겠다는 뜻에서다. 네 번째 균형올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 다른 지역은 오히려 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다. 끝으로 평화올림픽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올림픽이 돼야겠다는 생각이다.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 간에 평화가 지켜져야만 올림픽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다섯 가지 원칙이 모두 중요하지만, 핵심은 역시 흑자올림픽일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투자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아직은 대중화되질 않았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고 메달도 따는 것들인데,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컬링이라든지 루지라든지 하는 것처럼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경기장을 다 지어놓고 대회가 끝난 후에도 운영이 잘 될지 의문이다. 그래서 나름의 원칙을 세 가지 정도 세워 놓고 있다. 첫째, 기존 시설을 가능하면 이용한다. 기존 대학 시설 등을 최대한 이용해 가능하면 덜 짓도록 할 생각이다. 둘째, 불가피하게 지어야 한다면 최대한 다목적으로 짓는다. 상암경기장은 그 안에 운동시설, 스포츠용품점, 아울렛, 영화관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를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대회 후에 헐어버렸고, 여수엑스포도 필요한 50개 건물 중 20개는 항구건물로 짓고 나머지 30개는 가건물로 짓고 있다. 평창도 대회 개최 후 경기장 등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인가?

먼저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춰 나갈 생각이다. IOC에 약속한 바대로 철도·도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이런 하드웨어만 갖춰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 즉 문화·환경·운영능력·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투자도 해나갈 생각이다.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게 되려면 결국은 휴먼웨어가 돼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정신의 함양, 세계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 관용과 포용 능력을 높여 가는 것 등등. 그런데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강원도는 산이 높고 물이 깊어서 고립된 지역이 많다. 산맥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상하좌우로 갈라져 있다. 혈연·지연·학연 등을 바탕으로 지역주의도 있고 소지역주의도 있고 또 소소지역주의도 있다. 완전히 우리나라 축소판이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휴먼웨어, 통합능력을 저는 '강원 一道'라고 부른다. '원(one) 강원도'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인프라 건설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대회 유치로 지방재정이 부실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

전 세계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능력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 강원도는 재정자립도도 최하위 수준이고 예산의 규모 자체도 가장 낮다.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국가의 지원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도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몇 십 조가 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그런 수치에 근거해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하면서 '짚돌이 올림픽'을 치를 생각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조사단도 파견할 생각이다.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했는지 또 실패한 나라는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됐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해 평창올림픽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림픽 유치 발표 후 지역 내에 투기·과열경쟁이나 한탕주의의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다. 그런 투기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대관령 부근의 유치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 덕분에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다.(웃음) 그렇다고 올림픽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켜나갈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대회 개최가 지사 임기 이후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임기 이후를 생각하면 그건 잘못 가는 거다. 나는 그때는 보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은 임기 동안 강원도민의 삶에 최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과잉투자를 경계하고 물론 과소투자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정확한 균형점을 찾아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내 임기 중에 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들이 많이 이뤄질 텐데,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도록 사실에 기초해 탄탄하게 설계를 준비할 계획이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된 지난 7월 7일 새벽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점프대 앞에서 대회유치를 염원하던 강원도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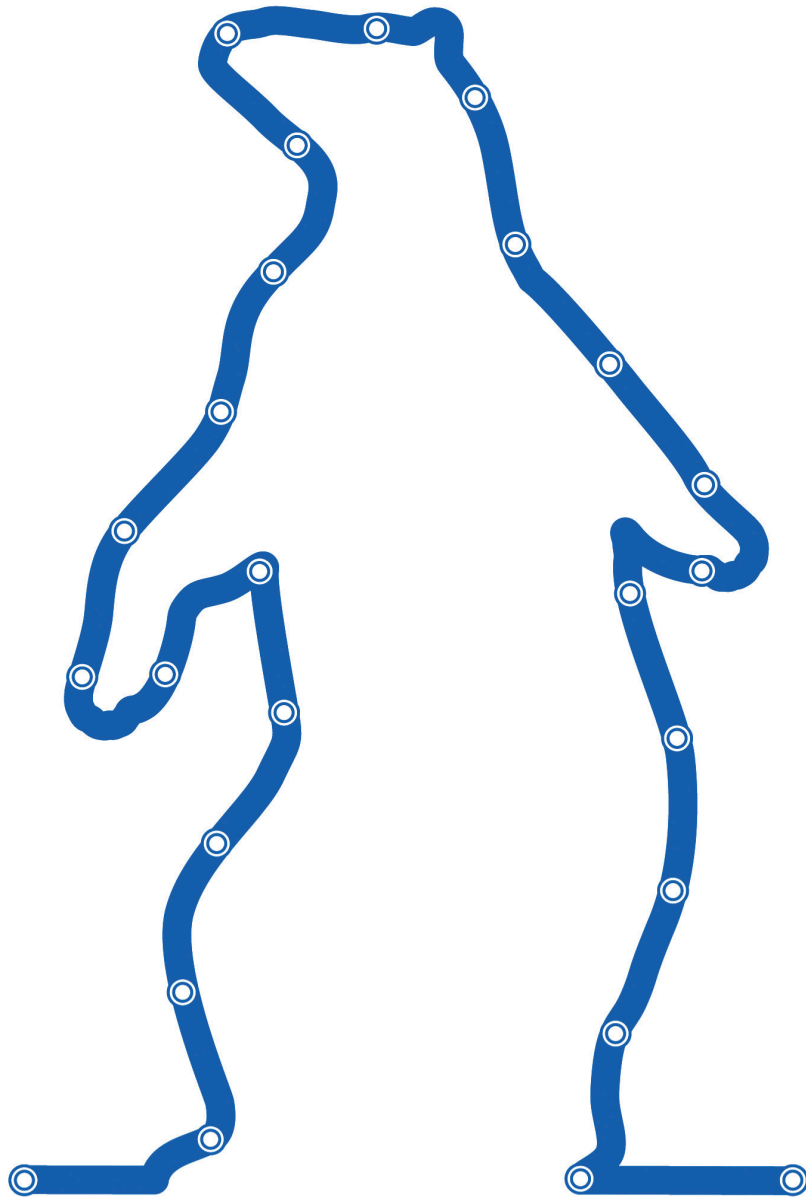
지사께서 꿈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후 평창의 비전은 무엇인가?

동계올림픽은 대부분 유럽에서 열렸다. 그동안 21번이 개최됐는데 2번만 일본에서 열렸다. 그만큼 동계올림픽은 유럽 올림픽이다. 개인적으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후에 유럽처럼 돼 있었으면 한다.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사람이 살기 좋으며 풍광이 아름답다. 자본주의의 야만적 느낌도 덜하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복지국가의 초입에 진입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식되지 않았으면 한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경제만 갖고는 안 된다. 경제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도 경제고, 문화도 경제고, 특히 철학이 경제다. 철학적·문화적·정치적 수준이 다 높아져야만 비로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은 그런 수준들이 다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만 따지게 되면 올라가다 주저앉고 올라가다 주저앉고 하는 일들만 되풀이될 뿐이다. 이는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초 없이 맹목적으로 경제만 중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나라경제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북극곰 살리는 버스?

우리나라 CO₂ 배출량 세계 7위. 운송수단 배기가스 중 자가용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75%,
우리가 편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선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출퇴근길에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CO₂도 줄이고 북극곰도 살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지구는 더 푸르러집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평창 동계올림픽, 일류국가로 가는 결정적 돌파구



서대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UN 대사
daewonsuh49@gmail.com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 이후 꼭 한 세대가 되는 3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88 서울올림픽이 산업화와 근대화의 성공을 배경으로 한국이 국제스포츠 무대에 신인왕(rookie)으로 데뷔한 것이었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월드컵·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한국이 이제 소위 국제스포츠 무대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최우수선수상(MVP) 수상자로 등장하게 된 것과 같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미 2만달러의 개인소득과 5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일원이 됐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외교에 더해 스포츠 면에서까지 주요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자신감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 세계 이목 집중, 국가브랜드 향상의 기회!

한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6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침체를 감안할 때 앞으로 대회가 개최될 2018년까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기와 목표를 갖게 됐으니 그 의미가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예상되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를 고려해 수익과 비용의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가장 큰 의미는, 이 기회를 활용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높은 문화시민 의식을 갖춘 품격 있는 국가를 이룩해 국가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는 데 있다.

”

측면에서 경제성을 우려하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특히 과거 많은 선진국들이 동계대회를 개최하면서 큰 적자를 보거나 후유증을 겪었던 사례에 비해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실적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가장 큰 의미는 이 기회를 활용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높은 문화시민 의식을 갖춘 품격 있는 국가를 이룩해 국가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는 데 있다.

21세기는 국가브랜드(nation brand)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브랜드는 약 20년 전에 영국의 사이먼 안홀트(Simon Anholt)가 개발한 개념체계인데 그가 개발한 국가브랜드 지수(index)에 따르면 한



지난 7월 6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자크 로게 IOC위원장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을 발표하고 있다.

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평가대상국 50개국 중 30위권이 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에도 뒤지는 30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고 한국인의 자긍심과 자신감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국가브랜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지도와 호감도는 아직 그만큼 낮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남이 보는 한국은 그 외형적·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뜻이다(필자 주: 안홀트는 국가브랜드를 남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즉 'how the nation is seen by others'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국가브랜드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브랜드나 기업브랜드와는 다르다. 국가브랜드는 한 나라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총체(aggregate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이기 때문에 국가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의 대내적·대외적 펀더멘탈을 개선·강화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총체적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KOTRA 조사 결과 국가브랜드 지수 순위가 30위권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이 가격 면에서 3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다.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여서 이 억울한 디스카운트를 역전시키고 프리미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세계시민의 의무 다할 때 '코리아 프리미엄' 생겨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기술 등 하드파워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의 의무(noblesse oblige)를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기반을 갖추

므로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 독창성을 발휘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면서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긍심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일류 선진 국가를 목표로 하는 한국이라면 이젠 자신감을 가지고 'Korea'를 넘어서 제도와 관행, 사고를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는 시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각국에서 선수, 임원, 취재진, 관광객 등 다수가 한국을 찾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널리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류국가를 지향하며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국민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다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때다. 나라경제

역대 최고 올림픽 개최 위해 최선 다할 것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kihkim@korea.kr

최초의 흑자올림픽인 1984 LA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구촌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은 각 분야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장이 됐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거둔 감격의 승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생산유발·고용창출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 제고, 국제스포츠 영향력 확대,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해 다양한 유·무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의 유산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5대 전략

을 마련했다. 남은 7년간 문화·환경·경제올림픽이라는 모토 아래 평창이 그간 강조해왔던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통한 올림픽 무브먼트의 확산(New Horizons)'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제반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대회유치체제로부터 대회준비체제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회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위원회 설립은 지난 7월 6일(현지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체결한 개최도시 계



이명박 대통령과 평창 2018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6일(현지시각)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약에 따라 개최지 결정 후 5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하지만, 조속한 체제 전환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3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강원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정부 각 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인적 구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장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과 같이 남은 기간 동안의 대회 준비와 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 특별법(가칭)' 역시 제정된다. 이를 통해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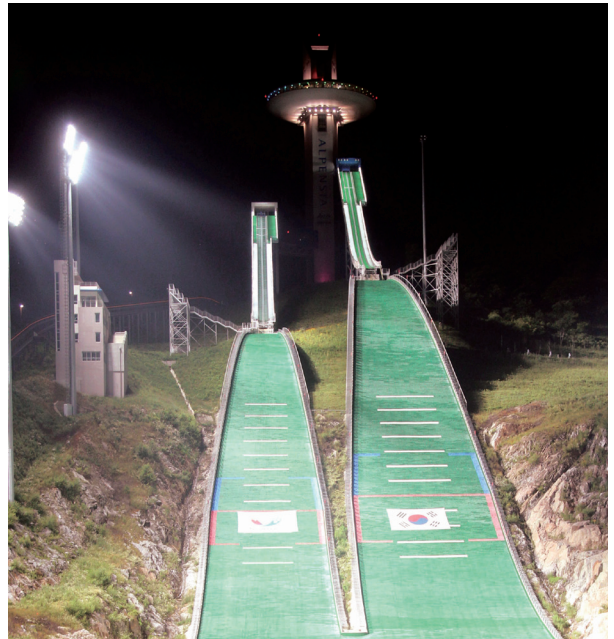
‘문화·환경·경제 올림픽’ 실현에 주력

본래 고대 그리스인들이 제우스신에게 바치는 제전경기(祭典競技)의 하나로 출발한 올림픽의 기원적 특성상 올림픽과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개최국의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는 올림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달성하기 위해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관광·홍보 등이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해외 거점지역을 정해 ‘한국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하고, 대회 기간을 전후로 ‘올림픽 참가국 중심의 문화페스티벌’을 여는 등 한국을 알리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역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1990년대 초부터 올림픽 패러다임이 지나친 상업주의를 경계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 회복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특히 ‘친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1994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는 인구 2만명의 작은 산골 마을로 최고의 강점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강조해 지금도 매년 상주인구의 10배가 넘는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고의 ‘친환경올림픽’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어 2018 평창에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평창은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해 신축하는 모든 경기장



평창군내에 건설되는 동계올림픽 경기시설들은 올림픽 개최 후 동계스포츠 경기장과 훈련장, 야외 공연장, 골프장, MTB, 산악 트레킹 코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핑 타워 야경

“그간의 대회유치체제로부터 대회준비체제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인적 구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장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과 같이 남은 기간 동안의 대회 준비와 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 특별법(가칭)’ 역시 제정할 계획이다.”

에 세계 3대 친환경건물 인증제 중 하나인 미국 그린빌딩협회의 ‘LEED 인증’을 획득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환경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토록 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은 ‘경제올림픽’을 실현해 흑자대회 달성은 물론이고 올림픽 유산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유도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연관 R&D 산업

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에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대회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 대회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올러 효과적인 경기장 사후활용을 위해 다양한 경기장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설계단계부터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릉에 건설될 아이스하키 I 경기장은 대회 후 해체해 원주로 이전한 뒤 실업팀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기타 경기장의 경우에도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홀, 홍보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것이다.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 더 드림 II' 본격 추진

이번 유치 과정에서 평창은 김연아, 이승훈, 이상화, 모태범 선수와 같이 과거에 비해 더 젊어지고 다양해진 얼굴들을 내세워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연아 선수는 더반에서 행해진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 본인 스스로가 정부가 지난 유치 과정에서 추진했던 '드라이브 더 드림 I'의 결과임을 강조해 많은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약 5,500억원을 투자해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드라이브 더 드림 II'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의 시설을 포함한 멀티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해 국가대표 외에도 등록선수들까지 상시에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스키 등을 대상으로 유소년 영재를 발굴해 동계스포츠 선진국에 유학을 시키거나 해외 지도자 초청강습을 통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할 계획이다. 종목별로 특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종목 간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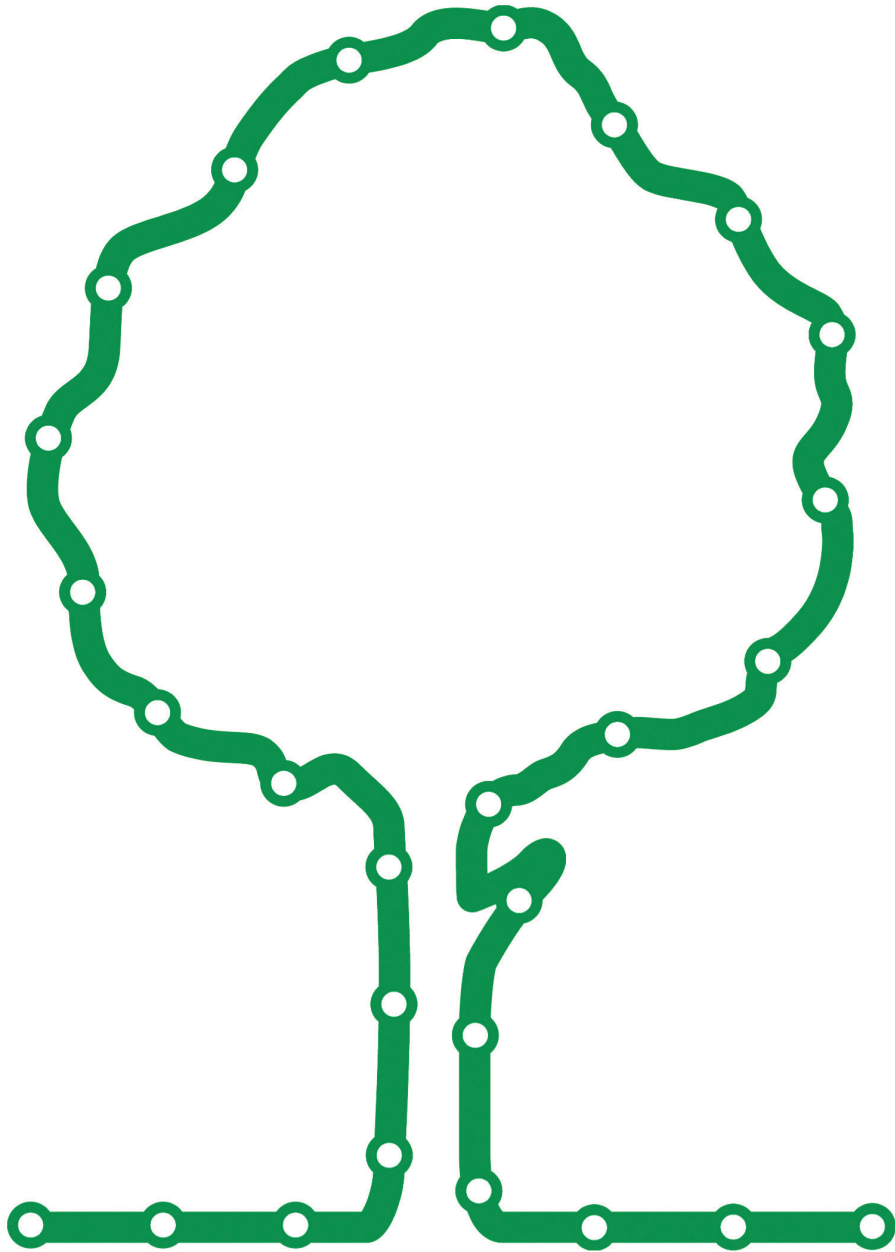
또한 체육과학연구원 내에 동계종목 전담팀을 구성하고 우수 선수의 개인 훈련기록을 관리하는 등 훈련을 과학화하고,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유소년들을 초청해 동계종목을 체험토록 지원하는 드림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함께 2013



지난 2월 1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제안한 '드림프로그램'이 열려 외국 청소년들이 스노보드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창 스페셜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동계스포츠를 통한 올림픽주의 구현 역시 도모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인재육성재단, 올림픽연합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위원회에 선수 출신의 인재를 활용하는 등 차세대 인재 양성을 통한 스포츠 외교력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간 국제경기대회는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88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산업화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 연구기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 한일월드컵을 통해 한국이 얻은 국가브랜드 홍보효과는 약 7조7천억원에 이를 정도라 한다. 앞으로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30년 만에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선진 대한민국을 각인시키기 위해 유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역대 최고의 올림픽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988 서울올림픽 세대에게는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그때의 자부심을, 2002 한일월드컵 세대에게는 'Be the Reds'라는 구호 아래 온 국민이 하나된 그때의 기쁨을 다시 한 번 안겨줄 수 있기를 그리고 2018년의 주역이 될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전 세계와 함께한다는 가슴 뛰는 설렘을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기자]



나무 심는 지하철?

우리나라 CO₂ 배출량 세계 7위.
운송수단 배기가스 중 자가용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7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만으로도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제 어딘가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CO₂도 줄이고 숲도 살리고!
당신의 작은 실천에 대한민국은 더 푸르러집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모델 제시할 것



김영훈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hoonky@korea.kr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 브랜드는 환경올림픽(Green Olympic)이어야 한다. 국제경기의 친환경적 추진은 세계적 흐름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환경을 올림픽의 3대 정신(Pillar)으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 올림픽 개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다는 의미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서 온실가스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올림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제로형 녹색경기장 건설이 핵심

환경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먼저 준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족하는 단계부터 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그 이후 이행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환경관리계획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설계와 건설뿐만 아니라 대회의 운영과 개최 후 시설 활용 및 복구 등에 관한 환경관리방안까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대회 관련 시설의 건설·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탄소제로형 녹색경기장으로 건설하는 것이 환경올림픽 개최를 위한 핵심사항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기반시설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녹색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이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국가 차원에서 환경올림픽 개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이면에 제정되는 특별법에 그 방향이 잘 반영돼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알파인 경기장 등 13개의 경기장과 선수촌 등 5개의 지원시설 신·개축, 원주-강릉 간 철도 복선화 등 교통 인프라의 조기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기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탄소제로형 녹색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올림픽 개최를 위한 핵심사항이다. 먼저 신규로 건설되는 기반시설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녹색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이를 설계에 반영해 건설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또 기존 경기장 관련 시설을 최대한 개·보수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형 설계,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그린IT 및 스마트그리드 연계,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해 탄소제로화를 실현하고,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이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냉·난방시스템을

픽 개최도시로 확대하고, 관광명소와 함께 그린투어(Green Tour) 명소로 연계·육성해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원 및 에너지의 통합관리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올림픽을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표하고, 탄소감축량에 따른 탄소상쇄기금(Carbon Offset Fund)을 조성해 이를 동계올림픽 인프라 조성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올림픽 경기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환경올림픽이 되려면 기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탄소제로형 녹색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인천문학구장 모습. 인천문학구장은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바비큐 존, 자전거 거처대 등이 새로 설치돼 '그린 문학구장'으로 탈바꿈했다.

지열·태양광·바이오매스 등의 친환경 에너지로 교체하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를 9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관 파트너십 통해 함께하는 환경관리체계 구축

경기장과 건축물에 대한 녹색화와 함께 환경올림픽의 표준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회 개최 도시에 대한 녹색화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 전체에 풍력·지열·태양광·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적용해 100%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조성하고 물 및 자원 순환시스템, 친환경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녹색도시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강릉시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를 조성 중에 있는데 이를 평창 동계올림

건설하는 것과 함께 대회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먼저 선수와 심판진뿐 아니라 관람객들도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 실천수칙('Me First' 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스피드 업' 경기진행으로 경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일회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등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정하고 쾌적한 경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반시설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환경관리 모니터링 활동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시민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대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관이 힘을 모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녹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탄소제로의 환경올림픽 개최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제경기 대회 개최 사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한글]

경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해야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chongkim@hanyang.ac.kr

평창의 10년간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동계올림픽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올림픽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8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교통망, 숙박시설 등에 들어갈 투자와 대회기간 내·외국인 관광객 소비 등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만 약 20조원 이상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등에 이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3대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6번째 나라가 됐다.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 그랜드슬램 달성은 국가 및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들의 자긍심 충족 등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 국가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물론 올림픽을 개최한 모든 국가가 수익을 거두고 국가 위상이 올랐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미국의 레이크플레시드와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휴양도시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했다는 밴쿠버 올림픽은 대회가 끝난 후 적자에 허덕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수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어떻게 준비해서 후자 올림픽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IOC 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건설해 원활한 대회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어진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규모 스포츠용품 아울렛과 레저 및 동계스포츠 체험관 등 관광과 쇼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일본 삿포르의 경우 1972년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돼 삿포르 눈 축제가 세계 3대 축제로 거듭났다. 평창 역시 우리만의 특색을 지닌 관광지이자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

IOC 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건설해 원활한 대회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어진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규모 스포츠용품 아울렛과 레저 및 동계스포츠 체험관 등 관광과 쇼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한다.

둘째, 경기력 향상 및 유망주 발굴에 힘써야 한다. 올림픽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더불어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은 전 세계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남은 7년 동안 동계스포츠 전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유망주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의 등장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5조2,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고와 스폰서 그리고 네이밍라이센스(이름을 사용하는 권리) 제품 매출 등의 직접적 효과가 1조8,201억원, 미디어 및 산업 성장효과를 포함하는 간접적 효과가 3조4,149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녀의 연기가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브랜드 제고는 단순히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지속적인 국내의 스포츠 대회 유치 필요

셋째, 국내 및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춘천시의 경우 국제 레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레저스포츠 선수와 동호인, 레저학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0 춘천 월드레저 총회와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월드레저 총회는 WLO(세계여가기구)가 1988년 캐나다 레이크루이즈에서 1회 대회를 개최한 후 매 2년마다 대륙별로 순환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레저 분야 학술회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월드레저 경기대회는 춘천시가 세계 최초로 창설한 레저스포츠 경기대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대회를 위해 총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삼삼동)은 첨단음향설비 및 가변식 무대설비가 갖춰져 있어 경기 시에는 관람석으로 사용되고, 무대행사 시에는 관람석을 후면으로 이동시켜 대형콘서트 등의 무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동안 세계 70개국 1만7천여명이 모여들었으며 전국 동호인 및 대학 동아리대회까지 함께 개최함으로써 대회규모가 확장됐다. 춘천시는 이 대회로 국내·외에서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춘천을 찾았으며 국제 레저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313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평창 역시 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쌓아온 신뢰와 희망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대회와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는 동계올림픽의 대중화에 보탬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흥행에 큰 발판이 될 것이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보여줬던 강원도민의 하나된 마음과 열정에 세계가 마음을 열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전 세계가 감동하는 동계올림픽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새 지평을 열게 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대한다. [내리]

평창을 아시아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자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wsshim@kcti.re.kr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한국 의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된 노력과 열정이 온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세계인을 감동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선진국 스포츠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는 의미도 크지만, 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서 막대한 유·무형의 효과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스포츠+관광’, 평창의 브랜드화 가능할 것

산업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가 20조4,9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효과와 관련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림픽 기간 동안 20만명의 관광수요가 발생하고, 3,920억원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로 인해 약 6,684억원의 생산유발효과, 9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가이미지 제고, 국민적 자긍심·자신감 고취 및 사회역량 결집 등 정신적 자산가치 창출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와 한국의 위상 제고, 국가브랜드 가치 증대로 인한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관광인프라의 세계화, 관광산업 파



지난 7월 29일 해외 57개국의 주한 대사와 가족, UN 산하 주한 3개 기관의 대표들이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를 방문,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관람하기 위해 알펜시아 콘서트홀로 향하고 있다.

급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있어 잔칫상만 멋지게 준비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했지만 이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관광올림픽’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관광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투자와 지역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후를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방향에서 합리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인프라, 시설 등 하드웨어 투자가 아닌 관광, 문화 등의 연계를 통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창출'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낙후지역인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통해 국토 동측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관광개발전략이 필요하다. 관광과 지역산업발전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하나의 국가 성장동력이 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단순한 스포츠 시설 개발이 아닌 지역발전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강원관광 종합발전방안’에 관한 지원 필요해

평창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포츠관광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관광여건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특히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시설 낙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창 및 강원도 지역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복합레저스포츠 관광목적지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광지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자연·문화 등과 연계된 스포츠관광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평창을 단순히 올림픽 개최지가 아닌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유인요소, 즉 강원도가 지향하는 레저스포츠도시에 걸맞은 관광콘텐츠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스키를 핵심으로 한 동계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동시에 백두대


간을 중심으로 한 신약자원을 활용한 건강지향형 스포츠관광 상품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류문화와 지역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동계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연계관광 목적지 홍보가 중요하다. 국제대회 개최는 지자체를 전세계에 알리는 유용한 홍보수단이며 특히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의 장인 올림픽 개최는 평창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구축된 이미지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의 동계스포츠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지역관광홍보와 연계시키는 통합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동계올림픽 시설 역시 스포츠관광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평창은 동계올림픽의 핵심시설인 알펜시아 리조트와 여기에 미디어 빌리지가 추가 건설될 경우 향후 관광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기장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활용도를 고려한 시설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관광·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창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작은 마을 ‘평창’은 국제미디어에 수시로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새로운 ‘평창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대비 ‘강원관광 종합발전방안’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휴양목적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있어 잔칫상은 멋지게 준비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했지만 이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은 부족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관광올림픽’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담론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적 성원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유치가 성공했고, 이제는 성공적 개최의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올림픽 유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 문화올림픽,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나아가 관광올림픽을 준비해 강원도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힘을 쏟아야겠다. 

탄소 제로를 넘어 'O₂ 플러스' 올림픽으로



엄기증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gjeungum@gmail.com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 국민의 중심에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환경은 스포츠, 문화와 함께 올림픽정신을 지탱하는 중요한 3개의 기둥 중 하나다. 전 세계는 과연 평창이 어떻게 최대한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올림픽시설을 설치하는지, 또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환경과 관련해 평창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저탄소 올림픽 운영이다. 동계올림픽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로 야기된 겨울철 온도 상승과 이로 인한 적설량 감소일 것이다. 적설량 감소는 실내빙상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스키를 비롯한 설상경기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간파한 2006년 이탈리아 터린(Turin)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기후변화를 그들 환경 플랫폼의 주요 분야로 다루기도 했다. 평창 역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에 어떻게 저탄소 녹색올림픽을 준비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암댐·풍력단지 등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해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환경 부문에 관한 비드파일(후보도시파일), 2018 올림픽시설의 사전환경영향 평가보고서, 'Green Dream: O₂ Plus Winter

Games 특별보고서'를 제출해 친환경, 저탄소 녹색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IOC에 제시한 비전의 핵심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뛰어넘어 'O₂ 플러스'(O₂ Plus)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0 밴쿠버가 제시했던 저탄소 녹색올림픽의 목표 역시 탄소중립이었다. 즉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데 있어 가능한 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올림픽을 지향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한 탄소는 최대한 상쇄시켜 중립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러한 탄소상쇄를 뛰어넘어 저탄소의 친환경요소를 오히려 더하는 'O₂ 플러스'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의 이동을 제안했다. 이러한 O₂ 플러스는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이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동계올림픽 운영의 표준모델이 될 것이다.

O₂ 플러스의 저탄소 녹색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취해야 할 환경비전을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눠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저탄소 녹색올림픽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1991년 건설된 1억8천만kWh/년 발전량을 가진 도암댐이 있다. 현재 도암댐은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에서 비료 성분이 포함된 물과 대관령 축산폐수, 용평리조트 및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발전 방류수가 남대천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도암댐 발전 재개를 놓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재 도암댐 상부에 수질개선 시범장치(2만톤/일)가 설치됐으며, 올 9월까지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쳐 하루에 4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을 강릉 남대천 상류부에 증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도암댐의 수력발전 재개가 이뤄진다면 개최도시인 평창 전력사용량의 120% 생산이 가능하며, 연간 12만6천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평창 경기장 주변의 풍력단지 시설을 사용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소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하고 강릉에 지역적 특성(해안가)을 고려한 해양바이오에탄올 생산플랜트, 심층수 집단에너지시설, 태양열·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복합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강릉시 일원에는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화 시설(MBT)이 건립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화석연료 사용도 줄일 예정이다.

둘째, 건축 분야다.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LEED제도(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 그린빌딩 협회(USGBC)가 만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인증을 받게 하고 기존 건물은 친환경 개보수 및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알펜시아, 보광 휘닉스파크 등 기존 건물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난방 에너지를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RDF),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평창, 환경모범 생태도시 지정도 고려할 만

셋째, 교통수송 분야에선 녹색교통체계 구축으로 이동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닌 이동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간선급행버스체



헬기에서 바라본 강원도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단지 모습

계(BRT; Bus Rapid Transit)를 확충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그린 IT 분야는 편리한 녹색 IT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감시하고 줄일 수 있는 유무선망을 통합한 그린 인터넷을 구축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물자원 순환 분야는 비점오염원 총량관리를 통한 수질관리, 중수 및 우수 재활용 시스템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수자원 절약 등 물재생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 자원 재이용 및 재활용 분리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발생 제로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시민참여 분야는 올림픽 개최도시를 민관 거버넌스의 환경모범 생태도시로 지정해 21세기 미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여주는 세계적 모델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올림픽 개최 관계자만이 아닌 지역주민, NGO 단체, 전문가, 행정가 등이 올림픽 개최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최 후 활용방안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분야별, 단계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세계인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친환경적이며 저탄소 모범 올림픽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관영 기자]

한국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기틀' 마련하자



김미숙

체육과학연구원
박사
mskim@sports.re.kr

마침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유치하게 됐다. 지난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투표에서 평창은 총 95표 중 63표를 얻어 독일 뮌헨(25표), 프랑스 안시(7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개최의 영광을 안았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러시아, 미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여덟 번째 국가가 됐다.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국내 동계스포츠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 방

안을 마련할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빙상 위주에서 벗어나 썰매·설상 종목도 육성

1948년 제5회 생모리츠 동계올림픽부터 1980년대 말까지 한국 동계스포츠는 올림픽 참가에만 의의를 둘 뿐이었다. 그러나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김윤만(은1)과 쇼트트랙의 김기훈·이준호(금2, 동1)가 동계올림픽 참가 44년 만에 첫 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에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2년 솔트레이크(14위)를 제외하고 꾸



지난 8월 12일 강원 평창군에서 '제15회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롤러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에 훈련 하도록 개발된 종목이다.

“

국내 유일의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동계스포츠의 현주소다. 경기력 향상의 기저인 시설 구축과 설상·썰매 종목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준히 10위권 이내의 상위권을 유지하며 동계스포츠 선진국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쉽게도 199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이 거둔 올림픽 메달은 100%가 모두 빙상종목에서만 획득됐다. 과거 쇼트트랙에서 최근 스피드스케이팅·피겨스케이팅까지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모두 빙상종목에 속해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썰매와 설상종목에서의 경기력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들의 선전 없이는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1990년대만 해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태릉선수촌 내에 있는 수영장에 물을 채워 만들었던 빙상장에서 훈련을 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김기훈, 전이경, 김소희 등 세계적인 쇼트트랙 선수들이 배출됐다. 그래서일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빙상시설 인프라는 그리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제규격의 빙상장은 국내에 유일하게 태릉국제스케이팅장 단 한 곳만이 있을 뿐이다. 이곳에서 스피드스케이팅·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동계스포츠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따라서 경기력 향상의 기저인 시설 구축과 설상·썰매 종목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산이 필요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조직위원회 구성, 문화올림픽을 위한 문화 관광 콘텐츠 확보, 환경 올림픽을 위한

효율적 친환경 인프라 구축, 흑자 대회 달성 및 사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제 올림픽 실현,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Drive the Dream II’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5대 전략 및 체제 정비를 발표했다. 그동안도 외시됐던 국내 동계스포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지원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중 2007년 ‘Drive the Dream’에 이어 발표된 ‘Drive the Dream II’는 동계종목 시설인프라 구축, 동계종목 우수선수 인적지원 확충, 종목 간 동반성장을 위한 다변화 도모, 동계종목 훈련 과학화 지원 강화 그리고 동계스포츠를 통한 올림픽유증 구현 및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Drive the Dream II’는 여타 동계스포츠 발전 방안과는 다른 확실한 차별성을 띠고 있다.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5,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 없이는 더 이상 한국 동계스포츠의 발전 또한 확신할 수 없다. 2009년 「체육백서」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운동 여덟 가지(수영, 골프, 요가, 헬스, 등산, 걷기, 테니스, 배드민턴)에 동계스포츠는 단 한 종목도 들어 있지 않다.

물론 동계스포츠는 계절성·접근성·경제성에 민감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라 이 같은 결과가 당연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키장·빙상장 시설 수와 동계스포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실제 참여도와 관심도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동계스포츠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어우러진다면 7년 후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와 함께]

절반의 성공에 그친 IEA 비축유 방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6월 23일 올 초 리비아 석유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석유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 이후 세 번째로 회원국의 비축유를 방출했다. 이번 대응에 대해 석유시장 수급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유가안정에 도움을 줬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석유공급 차질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대응을 발동함으로써 발동기준을 완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유가 인하 실패 등으로 세계경제의 연착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973년 중동 산유국의 석유 수출금지조치로 촉발된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석유 소비국들이 가입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설립됐다. 국제에너지프로그램(IEP) 협정에 OECD 16개 회원국이 1974년 11월 서명함으로써 창설된 이후 12개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총 2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IEA 회원국이 되기 위해선 OECD 회원국으로서 석유 수입물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석유 비축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IEA는 설립 취지에 맞게 산유국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석유시장 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비축유를 유지함으로써 석유 소비국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IEA는 올해 초 리비아 석유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석유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 이후 세 번째로 회원국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IEA는 석유시장의 물량공급에 증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는데, 첫 번째는 1990~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시, 두 번째는 2005년 카트리나 태풍 피해 직후였다. 이 글에서는 최근 IEA 비축유 방출 결정 관련 논의 경과, 방출효과 평가와 함께 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 미칠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유가가 아닌 석유시장 수급을 감안한 결정

올해 초 발생한 이집트·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지역 원유생산 중단으로 인한 유가급등 움직임에 대해 지난 2월과 5월 개최된 IEA 이사회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산유국의 일부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석유수요를 충족할 공급물량은 충분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OPEC 등 산유국의 증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IEA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비롤(F. Biorl) 박사는 *Financial Times* 등 세계 유명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가가 2010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유가는 원유수입국의 국제수지·재정 악화, 물가상승 등 부담을 가중시켜 3차 석유위기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6월 8일 개최된 OPEC 석유장관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원유증산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유가상승을 초래했고 세계경제의 더블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 회의 직후 추

가적인 원유공급 능력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원유 증산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여름철 정유제품용 원유 수요 증가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증산 원유가 시장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장 문제가 해결돼야 석유 시장이 안정화되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IEA 회원국의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IEA는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을 위해 초기 비상대응계획(ICRP; Initial

Contingency Response Plan)에 명시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ICRP는 석유시장 교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공동대응을 위한 합의로 총 6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1단계(종합평가): 석유시장 예비평가 보고서 작성, 회원국 전달, 2단계(공동대응 요청): 공동대응 필요성을 담은 석유시장 초기평가 보고서(30일간 방출물량 명시) 회원국 전달 및 공동대응 요청, 3단계(협의): 각국 이사회 멤버와의 공동대응 실행 관련 협의 진행, 4단계(실행): 공동대응 관련 반대 없을 경우 각국에 공동대응 실행 공지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5단계(이사회): 공동대응 효과 평가 및 공동대응 연장 등 검토, 6단계(모니터링/종료): 석유시장 모니터링, 공동대응 종료 및 비축유 보충일정 관련 권고]

이에 따라 6월 10일 IEA 사무국은 OPEC 석유장관회의 증산합의 실패에 따른 추가적인 국제유가 상승, 리비아산 석유공급 물량중단 지속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전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석유시장 예비평가보고서를 회원국에 전달하고 단기간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요청했다(1단계). 6월 21일엔 그동안 확인한 회원국 입장에 기초해 공동대응을 발동하기 위한 석유시장 초기 평가보고서를 전달하면서 30일간 방출할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24일 정유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석유 비축유 346만7천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성남 대 한송유관공사에서 각 정유사의 유조차가 기름을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6천만배럴(하루 200만배럴) 중 각국이 담당할 물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2단계 및 3단계), 6월 23일 공동대응에 대한 회원국의 반대가 없음을 확인한 IEA 사무총장은 공식 언론발표를 통해 리비아산 원유생산 중단 등으로 인한 석유시장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4단계). 여기엔 IEA 회원국 총석유 소비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2개국(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터키·폴란드·벨기에)이 비축유 방출에 동참했다. 7월 20일 IEA 사무국은 비축유 방출 이후 30일간 석유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현 상황에서 비축유 추가방출보다는 석유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9월에 개최될 차기 IEA 이사회에서 공동대응 종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회원국에 통보했다. 따라서 IEA 이사회는 차기 회의가 열릴 9월 14~15일경 공동대응 종료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5단계 및 6단계).

IEA가 7월 20일 작성한 비축유 방출 30일간 평가보고서는 회원국이 7월 15일까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번 IEA의 공동대응은 고유가가 아닌 석유시장의 수급을 감안한 결정인 점으로 미뤄볼 때, 수급구조 및 정부 부

문 마진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담고 있다. 즉 이번 공동대응의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6월 9일 발표한 원유증산 물량이 시장에 도달할 시점까지의 다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지난 6월 OPEC의 산유량이 전월 대비 하루 80만배럴씩 증가(사우디아라비아 70만배럴/일 증산)했고, 7월 말 이후까지 석유시장에 회원국 비축유가 방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석유시장 수급상황은 공동대응 이전보다 완화됐으며, 정유 부문 마진이 개선되면서 계절적 수요증가를 보이는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유가안정에는 도움 줬지만 국제유가 인하는 실패해

IEA 평가보고서는 이번 '리비아 공동대응'에 의한 총방출 물량인 6천만배럴(부문 비중 공공 64%, 민간 36%, 전체의 60%는 원유, 나머지는 정유제품)은 IEA 회원국 의무비축량의 2.5% 규모로, 2005년 카트리나 태풍피해 시 발동한 공동대응에 비해 빠르게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리비아 공동대응이 국제유가의 하락보다는 시장수급 완화에 목표를 뒀다고 설명하면서 7월 20일 기준 국제유가가 이번 공동대응 발표시점인 6월 23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만약 공동대응이 없었을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EA의 리비아 공동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세계경제 연착륙에 필요한 국제유가 인하를 목표로 IEA가 한정된 전략 비축유 물량을 토대로 석유시장에 개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좋지 않은 선례만을 남겼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다. 특히 *Economist*는 수차례 칼럼을 통해 IEA 공동대응의 문제점을 첫째, 발동시점의 문제(지난 4월 배럴당 125달러를 정점으로 국제유가는 6월 중순 115달러 수준으로 하락, 그동안 누적된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요가 감소되는 시점에 공동대응이 실행됨.) 둘째, 석유시장의 불확실성 가중 문제(이미 변동성이 높은 석유시장에 IEA라는 변수가 추가됨.) 셋째, 국제유가 인하목표 실패(7월 중 국제유가는 공동대응 실행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복귀) 넷째, 공동대응 발동기준 완화 문제(석유공급 차질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대응 발동) 등으로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IEA의 리비아 공동대응에 대한 정확한 평가

는 비축유 방출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번 대응이 OPEC 산유국의 증산물량이 시장에 도달할 시점까지 석유시장의 수급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유가안정에 일정부분 도움을 줬기에 긍정적이었다는 평가(IEA)도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와 달리 석유공급 차질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동대응을 발동함으로써 발동기준을 완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유가 인하 실패 등으로 세계경제의 연착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감안할 때, '절반의 성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는 국제적 공조 없이는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IEA 비축유 방출은 97%가 넘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국제적인 에너지기구와의 네트워킹 및 인력진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대응 논의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다. 이는 IEA 사무총장 등 담당자와의 사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부서에 파견된 한국석유공사 직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IEA의 대응이 이라크 전쟁 및 카트리나 태풍 피해로 현실화된 석유공급 차질에 대한 대응과 달리 예상되는 석유수급 차질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동했다는 비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IEA의 비상시 공동대응 발동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기준
주OECD대표부 참사관
andyashley@naver.com

러시아, 대형 국영기업 민영화 적극 추진

러시아 경제는 석유 및 가스 생산에 기초한 에너지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생산 및 수출 관련 에너지산업이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약 30%(2008년)이며, 에너지 수출이 총수출의 67.5%(2010년)를 차지한다.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는 곧바로 유가하락을 가져왔는데, 세계 유가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브릭스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007년 8.1%였던 경제성장률이 2008년 5.6%로 낮아졌고 2009년 -7.9%라는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다.

러시아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2009년 -8%에 가까운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으며 자국의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의존형 경제를 바꾸고 고도기술산업 중심의 산업 다각화 및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영기업 민영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러시아 경제의 산업 현대화, 경제체질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주의 잔재 벗고 선진 경제체제로의 변모 꾀해

러시아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주의 시대의 비능률적인 잔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회주의 시대 산물인 국가 소유의 기업형태에서 벗어나 경영효율화를 꾀하고 더 나아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코자 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고 선진 경제체제로 나아가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민영화 정책에 포함된 국영기업은 에너지·교통·광산개발·농업 등 주요 기간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기간산업 중사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외국투자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으니 러시아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했다. 민영화 계획의 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영화의 목적은 국영기업 경영효율화, 재정적자 해소,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 분야 정부역할 축소다. 서방세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경제정책이 CIS(독립국가연합)체제에서 벗어나 러시아 연방공화국 탄생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추진기간은 2011~2013년으로 3년간이며, 이 기간 중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은 석유 등 에너지, 은행·철도·농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 900여개다. 이들 국영기업 자산을 매각해 확보되는 예상수입은 약 1조루블(약 350억 달러). 일단 추진기간으로 3년이 정해졌지만 2013년 이후에도 민영화는 추진돼 2015년까지 5년간 약 600억달러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민영화 대상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Sberbank),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Aeroflot), 국영철도회사 러시아철도공사(Russian Railways) 등 국가 기간산업 대형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민영화 계획은 2010년 연초 실행안 작성 시까지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의 50% 이상 지분을 고수할

방향이었으나 2010년 10월 푸틴 총리가 “정부가 가진 국영기업 지분을 소액주주 수준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경영권 이양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일부 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2015년까지 연장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 계획은 2013년까지를 이행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1~2013년이 민영화 추진의 중요시기인 셈이다.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 국영 철도 회사를 포함해 세계 굴지의 석유회사 로즈네프트(Rosneft), 국영 수력·풍력기업 루스히드로(Rushydro) 등 국가 기간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의 주식 지분이 향후 3년간 매각된다.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가 추진되는데 이때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러시아 연합곡물회사(United Grain Company)는 정부지분 전체(100%)가 매각되고 해운회사 소브콤프로트(Sovcomflot)도 지분 50%-one share가 매각될 계획이다. 소브콤프로트는 지분의 25%를 2012년에 나머지 25%-one은 2013년에 매각되게 된다.

은행 분야로는 스베르뱅크, VTB(대외 무역은행),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등의 민영화가 추진된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는 정부지분을 2014년까지 50%(controlling 50%)로 줄여나가게 되며, 중앙은행은 은행의 지배주주가 되는 60.3%의 정부주식만을 보유하게 된다. VTB도 35.5%-one share의 지분을 매각한다.

러시아철도공사도 2013~2015년 기간 중 지분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밝혔으며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도 50%(controlling 50%)까지 정부지분을 줄일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표 1〉 2011~2013년 민영화 대상 주요 국영기업

| 기업명 | 업종 | 지분매각률 | 기업성격 |
|----------------------------------------------------|----------|----------|--------------|
| 연합곡물회사(United Grain company) | 농업 | 100% | 국영 곡물회사 |
| 소브콤프로트(Sovcomflot) | 해운 | 50%-1주 | 러시아 최대 해운회사 |
| 농업금융회사(Rosagroleaing) | 농업금융 | 50%-1주 | 국영 농업금융회사 |
| 대외무역은행(VTB bank) | 은행 | 35.5%-1주 | 러시아 2위 은행 |
| 로즈네프트(Rosneft) | 석유 | 25%-1주 | 러시아 주요 석유기업 |
| 러시아철도공사(Russian Railways) | 철도 | 25%-1주 | 국영 철도회사 |
| 러시아농업은행(Russian Agriculture Bank) | 은행 | 25%-1주 | 농업 분야 전문은행 |
| 루스나노(Rusnano) | 정밀전자(나노) | 10% | 국영 나노기술공사* |
| 루스히드로(Rushydro) | 풍력발전 | 7.97-1주 | 국영 수력·풍력발전기업 |
| 스베르뱅크(Sberbank) | 은행 | 50%-1주 | 러시아 최대 은행 |
| FGC(Federal Grid Company of Unified Energy System) | 전력 | 4.11%-1주 | 연방 전력회사 |

주: *루스나노, 2011년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추가됨.

〈표 2〉 2011년 주요 기업 민영화 추진 진행현황

| 기업명 | 진행현황 |
|----------------------------------------------------|----------------------------------------------------------------------------------------|
| 대외무역은행(VTB bank) | 2011년 2월 주식 10%를 33억달러에 매각했으며, 이탈리아 Generali, 중국펀드 등 해외투자자가 참여함. 2012년 15%의 지분 추가매각 예정 |
| 스베르뱅크(Sberbank) | 2011년 3, 4분기 약 60억달러 지분매각 예정 |
| 소브콤프로트(Sovcomflot) | 2011년 중 IPO(주식 신규상장을 통한 기업공개)를 통해 약 10억달러 규모 지분매각 예정 |
| FGC(Federal Grid Company of Unified Energy System) | 해외 IPO를 위해 런던 증권거래소(LSE)와 사전 준비작업(2011년 3월 28일 대인론 발표) |
| 루스히드로(Rushydro) | 중국 또는 유럽 투자자에 주식매각 가능성 검토 중(2011년 3월 28일 로이터통신 통해 발표) |
| 로즈네프트(Rosneft) | 2011년부터 지분매각 예정이나 세부정보 미공개 |
| 연합곡물회사(United Grain company) | 2011년부터 지분판매 예정이나 아직 세부정보 미공개 |
| 농업금융회사(Rosagroleaing) | 세부정보 미공개(2013년보다 늦어질 전망) |
| 러시아철도공사(Russian Railways) | 세부정보 미공개 |
| 러시아농업은행(Russian Agriculture Bank) | 세부정보 미공개 |
| 루스나노(Rusnano) | 2011년 8월 이후 1년간 주식 10% 매각 예정 |

러시아의 민영화 추진은 낙후된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1991년 구소비에트 연방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구소련 해체 이후에도 CIS라는 틀 속에서 구소련과 대동소이한 국가 연합체제를 유지했으며 경제구조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

려왔다. 1992년 CIS 해체와 러시아 공화국 탄생 이후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저효율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1998년 국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2000년 푸틴 총리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이루며 경제가 발전했지만 이마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사건을 맞닥뜨리며 2009년 -7.9%의 경제성장으로 후퇴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선진 경제구조를 이루지 못하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으며, 이를 위해 2009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산업현대화 정책을 계획했다. 국영기업 민영화는 산업현대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정부 통제를 줄이고 선진 경영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기간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분야의 대외 경제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고도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지분을 매각,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으며,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지분참여 등 자원협력 논의할 적기

러시아는 자원부국이다. 아직까지도 석유·가스 생산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이 가장 중요한 나라다. 우리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전자·조선·IT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했으나 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은 경제의 지속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러시아는 바로 그 자원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다. 로즈네프트, 루스히드로 등이 그것이다. 로즈네프트는 국영 석유회사로 연간 매출액 360억달러, 종업원 수만 해도 7만4천명이나 되는 거대기업이다. 영국의 BP가 로즈네프트와 석유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로즈네프트의 위상을 말해준다. 루스히드로 역시 국영 수력 및 풍력발전회사로 매출액 38억달러, 종업원 1만6천명에 달하며 광대한 러시아 국토의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을 맡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관련 기업(지방기

업) 59개사가 민영화 대상이며, 석탄(4개사), 석유화학 및 화학(11개사), 전력산업(25개사) 분야 많은 기업이 민영화 대상이다.

이들 자원 관련 민영화 대상기업이 우리에게는 지분참여를 시도해야 할 첫 번째 공략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6월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가장 주된 회담주제는 러시아산 가스의 중국 구매, 즉 자원협력방안이었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기간 러시아산 가스의 중국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급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향후 한국 경제에서는 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며 러시아는 자원협력의 주요 파트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지분참여를 통한 석유·가스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가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적기인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는 경제개발부이며, 재무부·부총리실도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기업, 추진일정 등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며, 결정이 확정되면 러시아 연방 국가자산관리청(로스이무셰스트보, www.rosim.ru)이 민영화 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사항은 연방국방부(민아바로니)가 담당한다.

그 밖에 VTB, 스베르뱅크 등 투자관련 기관, 민영화 관련 외국은행, 컨설팅사(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모건스탠리, 크레딧스위스 등)를 통해서도 국영기업 지분매각 참여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KOTRA 및 KDI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희중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차장
hjkim24@kotra.or.kr

'나라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저널의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는 신용평가사

Judges with tenure, Economist, August 13th 2011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워렌 버핏은 이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쿼드러플A(AAAA) 등급'이 있다면 미국은 이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핏이 신용평가사의 일부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인지는

몰라도 신용평가사의 주식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는 3월 31일 현재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지분 가운데 12.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버핏은 신용평가사들의 기를 꺾으려는 정치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3대 신용평가사들이 계속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분식회계 사건으로 미국을 뒤흔든 엔론이 2001년 파산했을 당시 엔론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로 모기지 시장이 붕괴했을 때에도 시한폭탄에 불과한 수천 개의 구조적 모기지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이 상당히 정확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현재 신용평가사들에 붙은 불명예의 꼬리표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IMF는 신용등급이 국가파산 위험을 나타내는 훌륭한 지표라고 평가했으며 채권시장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디폴트 위험을 인지하기 수년 전부터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유로존 변방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 있다. 예컨대 일각에서는 S&P가 어떻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로존 부채위기로 곤경에 빠진 프랑스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S&P는 경쟁사들보다 먼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8월 5일(현지시각)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S&P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지 불과 3일 만에 일부 미국 주(州)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추가

시사하자 시장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한편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들이 '국가도 인정하는' 신용평가사라는 데 기인한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사들은 '규제 당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이들의 판단이 은행, 보험사, 펀드를 규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등급은 사적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AIG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이후 AIG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한 바 있으며, 투자현장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연기금 가운데 약 3분의 2가량이 3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기는 채권에 한해 투자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신용평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르면 법 제정 후 2년 내에 모든 연방기관은 신뢰성 평가 척도에서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하거나 이를 적절한 다른 기준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으며,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을 대체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은 3대 신용평가사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밖

정리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대외충격에 민감한 한국 증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특히 한국 증시의 낙폭이 컸다. 외신들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불안 속에서 유난히 큰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외신마다 엇갈리는 분석을 내놨다.

Wall Street Journal(이하 WJS)은 8월 17일자 기사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 한국 증시가 8월 둘째 주에 세계 증시들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글로벌 수요 부진 우려가 제기될 때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WJS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후 코스피지수가 급락하자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펀더멘털이 견실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투매현상을 막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Reuters 역시 8월 17일자 칼럼을 통해 미국시장의 침체가 한국 대기업들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하며 한국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지적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이 유럽 은행들로부터 받은 외화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이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관심이 많다는 점도 증시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Reuters는 이어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문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구의 증시 상황이 악화된다면 한국 증시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도 있었다. Financial Times(이하 FT)는 8월 16일자 칼럼에서 한국 증시가 세계경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점점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확산으로 지난 8월 19일 코스피지수가 115.70p(6.22%) 내린 1,744.88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한국거래소 모습

여전히 매우 높기는 하지만 수출 구성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유럽·일본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28%로 세 시장에 대한 수출이 40%에 달했던 2004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FT는 한국 증시가 공매도 금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들로 인해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으며 이제는 조금 더 주목받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AP통신은 8월 15일자 기사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극복한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다음 위기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로부터 굴욕적인 구제금융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을 단행해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발 경제위기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1997년보다 경제 회복력이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내외경제



김은정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장기적 경력 쌓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어수봉: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일·가정 양립'이다. 이는 여성 일자리 창출,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보육 등 다양한 사안들과 맞물려 더욱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여성고용 현실과 결혼·출산으로 겪게 되는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 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오은진: 우리나라 여성 노동의 패턴은 한마디로 'M자형'의 쌍봉형 곡선이다. 이는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노동력이 가장 우수한 30대에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40대에 재진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력단절

대부분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취업을 원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황을 파악할 만한 가구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발전 방안을 근거로 현황을 살펴보겠다. 2000년 이후 결혼·출산·가사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연령은 20대 57%, 30대 31%, 40대 9.5%, 50대 이상 2%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5%, 전문대졸 10.45%, 대졸 11.2%로 저학력의 경력단절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직종에 대한 분석은 2009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실태조사'에 잘 나와 있다. 경영·회계·사무 35.8%, 보건 의료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정책센터장

때 _ 8월 12일(금) 오후 3시
 곳 _ KDI 제3세미나실
 진행자 _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참석자 _ 김은정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정책센터장

17.2%, 영업 및 판매 10.8%, 교육 및 연구 7.3%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절이 일어났던 직종에서의 재취업은 비중이 줄고 있다. 즉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비중은 줄고 단순노동이나 개인서비스업으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김은정: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는 2008년 25~54세 기준 약 4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60만명 정도가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여성고용 실태의 주원인이 경력단절에 있기 때문이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인력의 저활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남녀 임금격차,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귀결되는 여성고용의 현실은 여성의 경력단절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어수봉: 지난 30년 동안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에 관한 한 모범국가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구조조정 이후 10년간 여성고용이 정체되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경력단절이다. 한편 과거에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을 못했다. 하지만 고학력화와 더불어 현재는 노동시장 진입에 큰 무리가 없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을 앞질렀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현재 여성고용률이 정체돼 있는 것은 들어온 사람이 다시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경력단절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오은진: 청년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0%에 육박한다. 대졸취업자를 비교해보면 남녀 차이가 2~3%p 정도다. 그런데 이 비율이 30대 초반에는 54%로 확연히 떨어진다. 초기 노동시장 진입보다는 고용률을 유지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경력단절 여성 취업욕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결혼을 기점으로 약 45.6%가 퇴직하고 있다.

김은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의 센터장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 "30대 초반에 여성경제활동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직접적 원인이 있겠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경력단절이 예상되는 일자리로 많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여성들이 장기적 경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후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방법이므로 여성 경력단절은 진입부터 살펴봐야 한다.

오은진: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조사해보면 대부분 출산이라고 답한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출산과 육아의 불편함을 견디면서까지 이 직장을 유지할 유인이 있는가'에 있었다. 직장을 나가서 받는 수입보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의 향후 기회비용보다 육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육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교사나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육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경력으로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어수봉: 여성고용의 현황과 문제점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니 재취업의 애로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는데,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오은진: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중심으로 재진입을 조사한 결과, 재진입을 시도한 사람 중 33% 정도만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재진입에 실패



김은정 과장

“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는 계층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학력이나 경력단절 기간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집중할지, 그 직후에 집중할지 달라지는 만큼 차별화된 사업을 더 개발해야 한다. ”

패했거나 아니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다. 40·50대 여성취업률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재취업은 하지만 개인사업장이나 단순노동직으로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회계·사무직에 여성이 첫 진출한 비중은 35.8%인데 재진입은 29%로 줄어든다. 대신 미용·숙박·음식·청소에서는 11% 정도가 첫 진입하지만 재진입은 21.3%로 늘어났다.

어수봉: 재진입의 어려움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시장 인프라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김은정: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의 눈높이가 높아 재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재취업을 원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 고임금에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오은진: 경력단절 여성을 받아줄 만한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즉 공급 측면도 중요하다. ‘워크넷’의 구인란을 보면 질 낮은 일자리인 시간제가 많다. 물론 풀타임이 아니니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능해 자연스러운 매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도 낮다. 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한편 고학력 여성을 하나의 범주로 보는데, 고학력이라도 단절을 5년 이상 경험하면 학력의 경쟁력은 사라진다. 그래서 학력보다는 단절기간에 따른 재취업 전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어수봉: 정책의 방향을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과 경력단절 후 재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자. 우선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현재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나?

김은정: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10년에 공동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돌봄·고용연계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그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다.

오은진: 유연근로제, 가족친화 경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중소기업이나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업 문화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기업 중심의 문화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어수봉: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 경력단절 여성에 초점을 맞춰 여성가족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새일센터’인데, 이에 대한 소개와 현황을 얘기해 달라.

김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9년 71개를 지정·운영을 시작했다. 2010



오은진 센터장

“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도가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기업 문화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꾸려면 기업 중심의 문화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



어수봉 교수

“ 스웨덴·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여성이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다시 취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연금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이다. 단절이 돼도 총경력을 일정기간 채우면 노후가 보장된다. ”

년 77개, 올해 90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취업상담, 동행면접,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가사부담 완화(밀반찬 서비스 제공) 및 양육부담 완화(아이돌보미 제공)로 또다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기업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센터를 통해 지난해 취업한 사람은 10만여명으로 62.1%의 취업률을 보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성취업자는 2009년에 비해 14만2천명이 증가했는데, 이에 비춰볼 때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 재취업은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2010년도 새일센터 취업자의 상용근로자비율은 47.4%에 달한다. 참고로 전체 여성의 상용직비율은 47.3%다.

어수봉: 여성을 더 배려하는 고용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경력단절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들을 정책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또한 스웨덴·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여성이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다시 취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연금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단절이 되더라도 총경력을 일정기간 채우면 노후가 보장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일정기간 사회보험 등의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정책은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듯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김은정: 새일센터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또한 재취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방 차원에서 첫 진입부터 단추를 잘 끼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진입 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사업장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야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학력에 따라 아니면 경력단절 기간에 따라 경력단절의 예방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직후에 더 집중할 것인지 달라진다. 차별화된 사업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오은진: 여성들이 전문 직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첫째, 진출한 직종의 임금수준, 정규직 비율이 떨어지니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단절을 경험했더라도 3년 안에 재진입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임금 갭과 직위 등 단절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단절이 됐더라도 얼마나 빨리 재진입시키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다.

어수봉: 장시간 근로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용과 관련된 사회복지, 직종별 차별 시정, 임금구조 등의 지표가 결코 나쁘지 않다. 물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적게 보이겠지만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취를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것은 장시간 근로 때문이다.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가령 우리나라 근로자 중 12시간 맞교대가 많다. 병원·운수·철강·석유화학 등 꼭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곳은 교대방식을 선진화하고, 대부분의 작업장은 심야근로를 규제하는 등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여성정책만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 활성화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 없이 자기 경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나리경제]

정리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꿈꾸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wszhin59@korea.kr

2007년 8월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불리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총 7개 법률이 통합된 덩치 큰 법률이 탄생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은행업·보험업 이외에 금융 관련 법령의 통합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의 자율을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해 선진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로 지속됐던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은 과도하게 성장한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종 금융 규제 방안을 내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밑그림을 그려놓았던 자본시장의 미래 발전 모습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웠다.

우리 금융투자업, 단순 주식중개업무에 치중

2008년 가을의 위기는 해를 세 번이나 바꾸는 동안 민간과 정부의 노력과 국제공조에 힘입어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듯했다. 물론 위기의 불씨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나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새로운 금융질서를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추구했던 당초 목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손질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

진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위기 이후에 제기된 국제 금융규제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이나 기업 직접금융의 내실화와 같이 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정책과제들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들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투자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한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증권 발행시장에서 증권인수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중개·공급하는 단순 증권업무에서, 기업설립을 위한 모험자본의 공급,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기업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의 전 과정에서 주선·자문하는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는 물론, 투자은행 기관이 수익 다변화를 위해 수행하는 프라임브로커(사모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내부주문집행(투자은행이 거래소에서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고객의 주문을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단순한 주식중개 업무만 치중하면서 회사채 인수, IPO 업무 등의 기업금융 업무에는 저가 출혈경쟁을 반복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M&A 자문, 국내기업의 해외채권 발행 그리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구조설계 등의 고부가가치 업무는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 투자

은행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위험관리 능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속칭 ‘투자은행’)로 지정해 종합적인 기업 신용공여,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투자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2차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간합동위원회'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이 헤지펀드 도입 등에 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행으로 지정된 증권회사는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및 용자, IPO, 인수, M&A 자문에 이르는 기업금융 업무에서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지원,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 매매체결·청산·결제 등 종합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회사 투자은행 허용

자산운용산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안정되고 수익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선진화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 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펀드 간 합병 촉진을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맞춤형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탁업자가 수탁 가능한 자산종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정비했다. 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 펀드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둘째, 산업과 함께 시장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시스템), CCP(Central Counterparty, 중앙청산소)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 거래소는 M&A, IPO 등을 통해 대형화·글로벌화를 추구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독점거래소 형태로 운영돼 국제경쟁에서 뒤처졌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이 도입돼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청산을 의무화할 것이다.

셋째, 상장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주주총회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상장기업들은 조건부 자본증권(일정한 조건에 따라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증권(새로운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 독립워런트(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대해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증권) 등 신종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자금조달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새도보팅(Shadow Voting; 발행회사 요청 시 원활한 주총 성립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현재는 대주주의 회사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새도보팅 제도는 주총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오히려 주총 활성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그간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왔음을 감안할 때 새도보팅 제도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공시 등과 관련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했다. 자본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금융시장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전 반적인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자 한다.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내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호가관여행위(스캘핑)도 행정제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과징금의 범위를 확대해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 산업 및 시장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과 평판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토종 IB가 출현할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기존의 위탁매매, 단순중개 위주의 영업에서 신성장 분야 기업발굴, M&A 자문 등 종합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의 실물시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중개서비스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체거래시스템 등이 도입돼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내 주도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맞춤형 금융상품이 출현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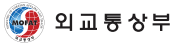
투자은행 시작도 하기 전에 문단을 걱정부터 해서야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한데 모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지만 입법예고를 한 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기로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투자은행 육성이 웬 말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 고민은 때 이른 걱정이다. 우리 산업이 아직 투자은행 업무를 시작도 못해 본 상황에서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문단을 우려부터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진 투자은행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그간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혁신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혁신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정책결정은 어떠한 혁신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꿈꾸기 때문에 이러한 대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싶다. 성공 여부는 시장과 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 해 본다. 나
의
경
제

- 50 페루, 칠레에 이은 두 번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한·페루 FTA, 8월 1일 발효
외교통상부
- 52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 54 녹색생활의 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한다!**
그린카드 전국 출시
환경부
- 56 '고용영향평가'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한다**
'고용영향평가' 본격 실시
고용노동부
- 58 2020년 5GB 파일이 4초면 다운로드 끝!**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페루, 칠레에 이은 두 번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한·페루 FTA, 8월 1일 발효

우리나라와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지난 8월 1일 발효됐다. 한·페루 FTA는 2005년 말 양국 정상회담 시 페루측이 제안한 것으로, 2007~2008년 양측 민간 연구기관 간 수행된 공동연구를 거쳐 2009년 3월 서울에서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 개시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양측 대표단 간 최종협상과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전체 협상이 타결됐다. 타결 직후 페루 대통령궁에서 양국 통상장관 명의의 협상타결 관련 공동선언문이 발표됐고, 지난해 11월 15일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졌으며 올 3월 21일 양국 통상장관이 협정에 서명했다.

美·中보다 우월한 협상결과 거뒀

한·페루 FTA 상품양허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역 자유화에 합의를 이뤘다. 우리나라 107개, 페루측 5개를 제외하고 여타 부문을 모두 개방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철폐기로 한 것이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우리가 전체의 97.4%, 페루는 98.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기로 했다.

〈표〉에는 수입액 기준으로 즉시철폐 단계에서 우리의 상품시장 개방 수준이 페루보다 다소 높게 보이거나 양국 간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품 분야 협상이

〈표〉 한·페루 FTA 상품양허 수준 비교

(단위: 건)

| 양허단계 | 우리 양허 | | | | 페루 양허 | | | |
|---------------|--------|--------|----------|--------|-------|--------|----------|--------|
| | 품목 | 비중 | 수입액(천달러) | 비중 | 품목 | 비중 | 수입액(천달러) | 비중 |
| 즉시 | 10,044 | 84.5% | 915,668 | 94.2% | 5,001 | 67.9% | 464,927 | 74.2% |
| 3년 | 223 | 1.9% | 407 | 0.0% | 58 | 0.8% | 312 | 0.0% |
| 4~5년 | 609 | 5.1% | 18,655 | 1.9% | 936 | 12.7% | 90,540 | 14.4% |
| (5년내 소계) | 10,876 | 91.5% | 934,730 | 96.2% | 5,995 | 81.3% | 555,780 | 88.6% |
| 7~8년 | 170 | 1.4% | 12,464 | 1.3% | 51 | 0.7% | 3,656 | 0.6% |
| 10년 | 524 | 4.4% | 24,692 | 2.5% | 1,240 | 16.8% | 67,512 | 10.8% |
| (10년 내 소계) | 11,570 | 97.4% | 971,886 | 100.0% | 7,286 | 98.9% | 626,948 | 100.0% |
| 10년 초과 | 202 | 1.7% | 0 | 0.0% | 79 | 1.1% | 0 | 0.0% |
| 계절관세 | 2 | 0.0% | 0 | 0.0% | - | - | - | - |
| 현행관세/ 양허제외 | 107 | 0.9% | 1 | 0.0% | 5 | 0.1% | 0 | 0.0% |
| 합계 | 11,881 | 100.0% | 971,887 | 100.0% | 7,370 | 100.0% | 626,948 | 100.0% |

주: * 품목 수는 HSK 2010 기준, 수입액은 2007~2008년 평균 수입금액 기준

타결됐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대페루 수입액 가운데 약 92%를 차지하는 아연광·동광·철광 등 광산물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우리의 시장개방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의 대페루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페루는 대형차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중형차 관세는 5년 내에 철폐하도록 했다. 이는 페루·중국 FTA에서 페루가 자동차 전 품목을 10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약속한 것이나, 페루·미국 FTA에서 페루가 대형차 관세는 즉시 철폐되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 우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페루의 컬러TV 관세는 즉시 철폐토록 하고 세탁기 및 냉장고에 대한 관세

도 각각 5년 내 및 10년 내에 철폐되도록 했다.

우리는 농수산 분야의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데도 성공했다. 쌀 및 관련 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물론, 쇠고기·고추·미늘·양파·감귤·사과·배·치즈·인삼·명태·민어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철했다. 페루측의 주요 관심품목인 오징어 중 대페루 수입이 많은 냉동·조미 오징어 등 주요 품목은 10년으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했다.

원산지 협상에서는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원자재 해외 조립비용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완화된 기준을 도입했다.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은 원자재 수입 및 글로벌 소싱의 증가추세를 반영해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물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상당수 품목에 대해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의 경우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교역을 촉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에도 합의했다.

한편 페루는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투자 분야를 개방한 반면,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의 개방 수준과 유사하지만 주요 분야에 대한 규제관한을 확보해 개방수준을 조절했다. 투자 분야에선 이행요건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국적요건 제한도 금지토록 했으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페루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또 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WTO GPA 회원국이나 페루는 그렇지 않으므로, 한·페루 FTA를 통해 페루의 정부조달시장을 새로이 개방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지재산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며, 협정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자국법에 따라 보호토록 규정했다. 우리는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등을 포함시켰으며, 페루는 페루 피스코, 출루카타스 도자기, 쿠스코 옥수수, 이카 피아르 롱 등을 포함시켰다.

협력챗터에서는 양국의 10개 관심 분야(중소기업, 어업·양식, 관광, 산림, 에너지·광물,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 해양운송, 문화, 농업)에서 다양한 협력활동 및 양국 간 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해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

자원부국 페루의 에너지·자원 개발에도 진출 가능

한·페루 FTA 체결을 계기로 우선,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페루 간 교역 추세(2006년 10억3,300만달러 → 2010년 19억8,200만달러)와 페루의 경제성장(최근 5년간 GDP 약 7% 증가)을 고려할 때, 한·페루 FTA 교역증대 효과는 한·칠레 FTA 체결 효과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지난 7년간 대칠레 교역량은 약 287%가 증가한 71억7천만달러(수출 462% 증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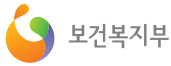
둘째, 우리 기업의 대페루 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TA를 통해 페루의 에너지·자원 관련 투자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2010년 기준 광물자원 공사, 석유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루에 15억6천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이 중 90%는 자원개발 분야에 이뤄졌다.

셋째, 한·칠레 FTA에 이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페루는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태평양 연안의 카야오(Callao) 항구는 한국과 중남미 간 최단거리이며, 세계은행은 페루를 중남미 국가 중에서 기업환경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페루와 FTA를 체결한 중국이나 우리보다 늦게 서명한 일본(2011년 5월)에 비해 유리한 대페루 수출여건을 확보했다. 한·페루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페루 시장에서 일본·중국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 기업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홍승인
외교통상부 FTA무역규법과장
seungin_hong@hotmail.com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천구청은 지난 7월 22일 서울 금천구 에이스하이엔드 6차 지식산업센터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 탁아시설인 '아이프 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에서는 구립 '아이프 어린이집' 개원식이 열렸다. 이 어린이집은 만5세까지 모두 70여명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야간 근무자를 위해 밤 10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이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해 24억원을 지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박봉규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이 덜어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전국에 모두 49개다. 4만2천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에는 모두 86만명이 일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은 44개로 아이들 수도 2천명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임대료 비싸고 설치·운영비 부담 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집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어린이집을 지을 땅이나 건물 내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 당시 산업단지 내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1층부터 3층까지로 제한됐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처럼 대도시에 있는 건물의 1~3층은 높은 분양가나 비싼 임대료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이미 분양이 끝난 산업단지에는 빈 부지조차 찾기 힘들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도 여력이 없다. 총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육아 부담 때문에 그만두는 여성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상 기업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추진할 행정인력이 없고 비용도 꽤 들어간다. 특히 설치를 주도하는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기업의 보육수요 조사나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일도 업무상 큰 부담이다.

셋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운영비 부담이 문제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육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모여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참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비 부담을 책임질 수 없는 형편이다.

어린이집 설치하면 지원시설 면적 30%까지 확대

이유를 알고 나니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올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가 회사가 있는 건물이나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비상대피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되므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린이집 설치층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화재 등 비상대피가 필요한 때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없는 영유아가 많이 모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면서 기업의 부담능력도 고려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올 4월부터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분양수익이 높은 상점과 편의시설을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건물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 등이 있는데, 건물주가 지원시설 내에 어린이집을 유치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원시설의 면적을 늘려줘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둘째, 인력 및 재정여건상 사업주 조합을 구성해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대표자회의가 주동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중소기업들이 공

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50% 이상을 부담토록 했던 것을 사업주가 자유롭게 부담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 아동수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단체(전경련)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대표자 등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산업단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이플 어린이집 개원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은 올해에만 6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인천 남동산단과 경기도 시흥의 시화산단, 광주 첨단산단에도 어린이집 착공이 오는 10월로 예정됐고, 부산 녹산산단과 경남 양산 소주공단에도 각 1개소가 올해 안에 개원한다. 특히 인천·시흥·광주의 산단 3개소는 전경련과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설치비를 투자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된다. 활성화 방안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7월 중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해 9월까지의는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성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전경련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기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획]



이상인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sanginne@korea.kr



녹색생활의 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한다!

그린카드 전국 출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3억540만톤에서 2007년 6억1천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산업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수송 부문 그린카 개발·보급, 비산업 분야 에너지 고효율 제품사용 등 부문별 감축정책을 수립·대응하고 있다.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생활문화 확산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없이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그린카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

그린카드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생활 인프라 정책이다. 모든 국민은 올해 7월 22일 출시된 '그린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손쉽게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그린카드를 소지한 개인이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녹색생활 실천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 영업창구에서 '그린카드' 1호를 발급받은 후 전달받았다.

첫째, '탄소포인트'란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여시점 기준 과거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해 온실가스 10% 이상 감축 시 연 최대 7만원(월지수; 서울시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일부 상이)을 지급한다.

둘째, '녹색소비'는 개인이 그린카드로 녹색제품(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인증 등)을 구매할 때 제품가격의 1~5%를 포인트로 적립받게 된다. 참여업체와 제품은 꾸준히 확대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생활을 촉진하기 위

해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과 면제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해당 지자체는 관광지 홍보 및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보여주지만 해도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그린카드' 발급 카드사에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금액의 10~2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린카드를 통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동시에 적립된 포인트 중 매월 일정액을 환경보호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기부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적립금액 등 인센티브 강화할 계획

정부가 녹색생활 인센티브 정책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어 편리성이 확보되며, 전산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별도의 시스템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인센티브(포인트) 마켓이 마련돼 있어 인센티브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향후 그린카드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 발전하도록 탄소포인트, 대중교통 적립금액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녹색소비 부문에 참여하는 기업 및 제품 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2010년 5,855개소)와 협력해 학교 일상생활 중 에너지 절감운동 및 녹색제품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4,300여 종교·시민단체 연합체) 등과 연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듯 그린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녹색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1%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는 어린 소나무 7억4,900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 시 포인트 제공을 통해 녹색소비를 확대하면 기업의 녹색제품 제조와 유통 확대로 이어져 녹색가치사슬의 선순환체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그린카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

그린카드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생활 인프라 정책이다. 모든 국민은 올해 7월 22일 출시된 '그린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손쉽게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혜택

| | 주요 내용 |
|-------|-----------------------------------------------------------------------------------------------------------------------|
| 국립공원 | · 직영 아영장(32개) 50% 및 주차장(40개) 10% 할인 |
| 휴양림 | · 전국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
| 서울특별시 | · 세종문화회관(자체예술단 공연) 20% 예매할인, 한강유람선 30% 현장할인 |
| 대전광역시 | · 대전오월드 자유이용권 20% 할인 |
| 광주광역시 | ·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공연 20%, 우치공원 50%, 시립미술관 20%, 시립민속박물관 40%, 광주디자인센터 디키빌 20% 할인, 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500원 할인 |
| 경기도 | · 문화의전당 기획공연 및 전시 20% 할인 · (수원시) 수원박물관, 수원화성 및 수원화성박물관 무료관람, 장안구민회관 시설이용료 10% 할인 · (부천시) 부천식물원 및 부천자연생태박물관 무료관람 |
| 강원도 | ·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 50% ·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오션700 및 알파인코스터 20% 할인 |
| 경상남도 | · (김해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전시관 입장료 10% 할인 · (합천군) 박물관, 영상테마파크 무료관람 및 오도산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
| 전라북도 | · (전주시) 동물원 무료입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공연 10% 할인 |
| 전라남도 | · (순천시) 낙안읍성,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드라마촬영장 무료입장 · (목포시) 자연사박물관, 문학관, 남농기념관 무료입장 ·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한국차박물관, 울포해수욕장탕 10% 할인 |
| 제주도 | · 성산일출봉, 만장굴, 민속자연사박물관, 항일기념관, 해녀박물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별빛누리공원 무료 ·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천문과학문화관, 감귤박물관 관람료 무료 |

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KB국민은행 전국 지점 및 전용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나의 경제



이영기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youngkee@korea.kr



‘고용영향평가’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한다

‘고용영향평가’ 본격 실시

외 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속도가 둔화됐다. 지표상으로 고용상황이 좋아져도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정책뿐 아니라, 경제·산업·복지 등 정부정책 전반에 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했다.

지난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최초 실시

2006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했고, 2009년 10월 9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시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0년 상반기에 지역전력산업 진흥,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등 5개 과제를,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등 2개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사업·정책 및 법·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2009년 2월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해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사업의 고용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평가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중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요청한 정책’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거나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평가할 과제가 선정되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정책과 고용과의 연계성,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 증감,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정책요소의 제시와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이 포함된 평가결과가 나오면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이후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 기획재정부로 보내 정책개선 및 재정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모니터링한 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해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모니터링한 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해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최초로 실시됐다. 상반기에는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지식경제부) 등 5개 과제가,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정책(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2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전에 고용효과를 검토해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 등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상시적 평가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평가센터로 지정

지난해 실시했던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처음으로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존에는 고용효과를 추정할 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는 분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구축효과를 반영한 거시경제모형 분석, 기존의 I-O (Input-output) 모형을 발전시킨 세밀한 분석,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측면의 분석 자료를 제공해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형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연구진의 평가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구체적인 정책개선방안 도출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평가모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연구자, 연구기관 등에 따라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정부정책에 대한 상시적·지속적인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올해는 시의성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 고용관련 전문가, 중앙부처 및



지난 7월 19일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숲해설봉사단 '숲자라미'(www.supzarami.com)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숲자라미는 은퇴노인들을 전문 숲해설가로 육성해온 생태체험교육 단체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2011년 고용영향평가대상 과제로 선정돼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자치단체에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그 결과, 신학협력중심대학 육성(지식경제부), 생태하천복원(환경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중소기업정책 자금융자(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 7개 과제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시), 기술닥터사업(경기도) 등 자치단체 4개 과제를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해 평가의 질을 높이고 평가자 간의 편차를 줄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의 활용 및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사후점검을 강화해나가고, 각 부처의 사업추진 시 사업의 효율성과 함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고용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포함해 시행 2년을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가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buheek@gmail.com



2020년 5GB 파일이 4초면 다운로드 끝!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 수립

최근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 지난 6년(2004~2006년) 동안 세계 GDP 성장에 평균 11%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은 그 등장으로 1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2.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도로·전력에 버금가는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의 급증으로 무선 통신의 양이 포화지경에 이르고 있다. 사용자는 느린 속도와 잦은 끊김, 비싼 요금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는 반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막대한 투자·유지비로 인한 수익구조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등 신규 네트워크 구축에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보다 100배 빠른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현 상황을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현재 1천2만명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5년 4천 213만명으로 급증해 무선 트래픽 폭증을 넘어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비디오 콘텐츠도 급증해 2020년에는 인터넷을 지나는 트래픽의 90% 이상이 비디오 트래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은 지능화와 내재화가 진행돼 이른바 사물 지능통신시대가 열려 2020년에는 인터넷 접속기기가 1천 억대로 현재의 50배로 증가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인터넷 이용자 수가 2배나 증가하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뒀으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기업이 없고 기술 역량도 취약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향후 10년간은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강국의 지위를 잃고서 인터넷 기술 소비국으로 전락하느냐,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느냐가 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지금보다 100배 빠른 10Gbps를 상용화시켜 전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할 계획이다.

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트래픽 폭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 산업 발전을 공고히 하고자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지난 6월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터넷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의 산업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5,389억원, 민간 37조6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2020년까지 현재의 100배에 달하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400초 걸리는 5GB

의 영화 한 편이 2020년에는 4초면 다운로드가 완료된다. 둘째,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2010년 현재 '글로벌 디지털 100혁신기업'에 단 한 개의 국내기업도 등록돼 있지 않지만 2020년까지 5개를 등록시킬 계획

이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고용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에의 기여다. 2012년까지 인터넷의 생산유발이 총 28조로 예상되나 2015년까지 총 73조로 증가시키고자 하며 추가고용은 2012년까지 7,700명에서 2015년까지 3만6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 기술소비국에서 기술생산국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첫째,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양적으로 확충하고, 구조 재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유선 인터넷은 가구당 100Mbps인 데 2020년까지 100배 빠른 10Gbps를 상용화시켜 전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고자 한다.

둘째, 인터넷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터넷 기술 소비국에서 기술생산국으로의 전환과 함께 기술력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특히 점진적인 R&D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고사상태의 국내 장비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라우터 및 서버 등을 통합해 분산 네트워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스마트 노드'(smart node)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체 및 통신사업자를 기술개발에 참여시켜 시장 수요와 연계된 장비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스마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사물지능통신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시장 활성화 및 민간 수요를 견인할 예정이다.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EU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와 같이 민·관 협력(매칭펀드 등)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넷째, 현재 연구용 위주로 활용 중인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망을 기업 등에 적극적으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개발 등의 산업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5,389억원, 민간 37조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로 개방해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 연구망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라시아 국제연구망인 TEIN(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을 관리하는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국제인터넷연구개발협력 교두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관련 유망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5개 거점대학을 선정해 글로벌 인재 배출의 장으로 활용하고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등을 통해 인터넷산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로드쇼 개최 및 네트워크 분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승인비중 확대, 유망기업의 해외 기업설명회(IR) 기회 제공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통신사 수요설명회, 장비유지보수율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해 국산 장비에 대한 수요를 확산시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다소 위험요소가 있지만, 해외 선진국과 경쟁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 만큼 돌아오는 결실은 크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미래경제



신홍순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통신망팀 사무관
hsshin@kcc.go.kr

복수노조 시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조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그 이전에는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노동관계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가입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받기에는 기본 인권의 하나인 노동권의 보장이 취약하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김영삼 정부는 전교조, 민주노총 등 소위 재야 노동세력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국내 노동권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ILO, OECD 등 국제사회 여론 등을 고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1997년 초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

322개의 신생노조, 상급단체 택하지 않은 비율 86%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연합단체 등 초기업단위 복수노조는 즉시 허용됐고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2002년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됐다. 그러나 2001년(2006년까지)과 2006년(2009년까지)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노사정 합의로 시행을 2번 유예했다. 2009년 말 다시 1번의 유예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12월 29일 소위 '추미애 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2010년 1월 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1년 7월 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1년 6월 야당은 물론이고 노사관계 선진화법을 주도한 여당의 절반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법 개정의 유효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수노조 허용 등 선진화입법(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포함)이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1일 13년간 4번의 유예를 거쳐 허용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는 시행된 후 이틀간 112개의 복수노조가 설립신고를 했다. 이후 신고가 주춤해져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아직 큰 혼란은 없다. 7월 초에는 하루 평균 27.7개의 노조가 새로 설립됐으나 하순에는 8.6개로 줄어들었다. 7월에 새로 설립신고를 한 322개의 노조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분화된 노조가 75%인데 신생노조 중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은 노조가 86%나 된다. 많은 노조가 양대 노총 모두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경쟁 현상은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8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설립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8개일 뿐이다. 새로 설립된 많은 노조가 기존 노조의 조합원을 끌어들이 과반수 노조가 되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90개 노조 중 서부발전노조 등 47개 노조가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틀간 설립된 노조 중 택시, 버스 사업장 노조가 절반이 넘는 61개인데, 사업주가 노조를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사업주와 노조 집행부의 유대관계가 유독 강한 교통업체 기존 노조에 대해 일반 노조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착륙하는 복수노조제 ... 제3노총 움직임 활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복수노조제도가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은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 설립이 허용되나 교섭창구는 단일화돼야 한다.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조원 수에 따라 노

“복수노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노조설립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본의 기업들과 같이 기업 내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져서 ‘기업 내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 교섭위원을 배분해 공동교섭단을 결정해준다. 노조가 있는 경우 조직대상의 대부분이 기존 노조에 가입해 있는 현실에서 기존 노조의 과반수 대표성을 깨뜨릴 수 있는 노조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도 큰 실익이 없다.

7월 1일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 노조가 소수노조가 된다 할지라도 유효하다. 새로운 노조가 설립돼 다수노조가 되면 노사협의회에서 노측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존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단협의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법시행 전에 일부 기업에서 기업 우호적인 소위 ‘알박기’ 노조를 설립한 부작용이 있기는 하나 이 조항이 복수노조가 설립된다 할지라도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법시행이 확실해진 지가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사용자 측은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동안 사측은 근로자들의 불만 요인을 제거하고 복지를 강화하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지향하는 어느 기업에서 성과 부진자에게도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했는데, 복수노조 허용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노조 설립이 혼란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밑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제3의 노총인 ‘국민노총(가칭)’의 설립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미 복수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인천지하철노조 등 공공기업 노조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투적 성향의 민주노총 계열의 사업장에서는 합리적 성향의 노조가 설립되고,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온건성향의 노조로 집행부가 바뀐 사업장에서는 민주노총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다. 한편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비노조경영을 추구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새로운 노조설립과 관련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있는 등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노동관계법」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활용해 실질적인 노조결성을 막아 왔다.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소수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성향의 노조가 사업장에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돼 이와 같은 전략에 의지한 비노조경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갈등관계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이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미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노조결성을 방해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복수노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과 같이 노조설립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본의 기업들과 같이 발언형 종업원 조직이 활성화돼 기업 내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져서 ‘기업 내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들이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추구할 때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조들의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ybpark@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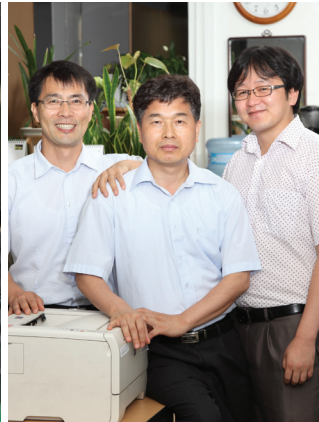
일자리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내일’을!

고용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취업 준비로 고민이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뛰는 사람들이 있다. 일자리가 최대 화두인 요즘, 고용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원들이 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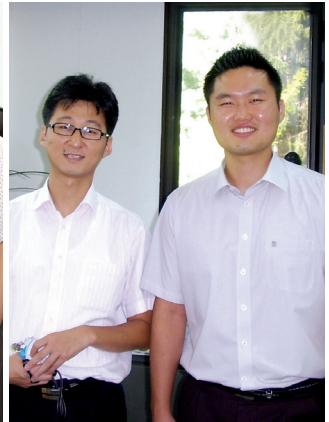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구경해 보실까요?



양정열 과장



(왼쪽부터) 이점석 사무관, 김영현 사무관, 남호재 주무관, 박상윤 사무관, 김동욱 주무관



대 학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청년구직자 A씨부터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싶지만 현실의 벽 앞에 움츠러드는 40대 직장인 B씨,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가 고민인 고등학생 C씨까지. 이들이 해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고민은 한숨 덜어진다. 전국 81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상담과 알선은 기본이고 생애단계별 직업진로지도서비스,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지원금,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용센터의 5천명 가까운 전문상담원과 직원들은 심도 깊은 상담을 토대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취업에 골인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한다. 병원에 종합병원이 있다면 고용센터는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계의 종합병원'인 셈

고용센터와 워크넷을 통해 취업 지원

이러한 고용센터를 총괄하는 곳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다. 이 과의 박상윤 사무관과 남호재 주무관은 고용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책임지며 고용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쓴다. 이병성 서기관, 이귀례 주무관, 박성훈 주무관은 고용센터의 취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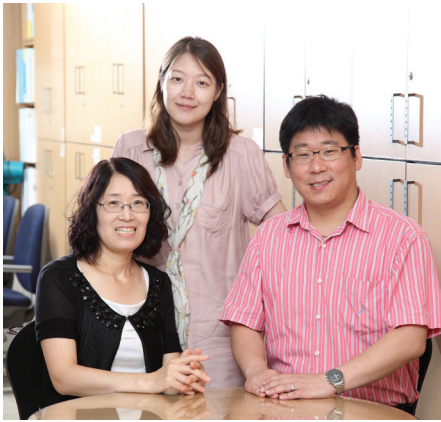
원 분야를 총괄한다. 저소득층가구 자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더 적합한 취업알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이어주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취업알선 시스템까지 모두 취업지원 3인방의 몫이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워크넷(www.work.go.kr) 방문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워크넷은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기업과 사람을 이어주는 취업포털로, 500만 명의 구직자와 80만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매일 35만명이 방문하는 워크넷에서는 다양한 구인정보를 볼 수 있고, 직종별·지역별·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로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 검색이 가능하다. 기업은 워크넷에서 적합한 인재를 검색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로 SMS와 이메일을 보내 채용계획 등을 안내할 수 있다. 1년 365일 날마다 2천명이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데, 1분에 1.3명씩 취업하는 셈이다. 그뿐 아니다. 워크넷에서 간단한 직업심리검사도 할 수 있다. 직업가치관 검사, 대학(학과) 흥미검사, 준고령자 직업선택도 검사 등 10여 가지의 직업심리검사가 준비돼 있어, 간편하게 개인의 적성을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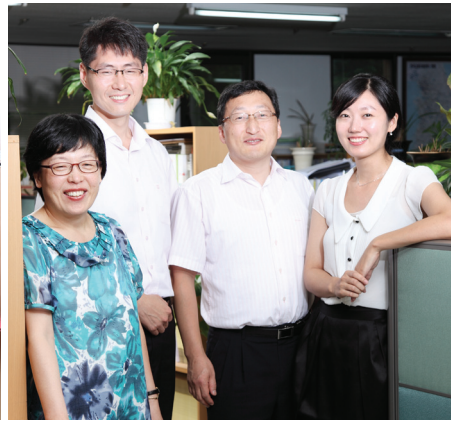
이점석 사무관과 최수진 주무관은 워크넷을 총괄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워크넷 만들기에 고심한다. 두 일꾼은 워크넷 하나만 검색해도 민간취업포털에 올라온 일자리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워크



(왼쪽부터) 김병성 주무관, 박근화 실무관, 김병화 전문위원



한현숙 실무관, 최수진 주무관, 박성훈 주무관



이귀례 주무관, 진철 주무관, 이병성 서기관, 한은숙 사무관

넷과 잡코리아, 커리어, 사람인 등 민간취업포털을 연계했다. 덕분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지 않아도 워크넷에서 한 번에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워크넷뿐 아니라 민간직업소개소나 민간취업포털을 활용할 수도 있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책임지는 것도 고용서비스정책과의 몫인지라 민간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도 중요하다. 김동욱 주무관이 「직업안정법」과 함께 1만여개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건설일용, 가사·간병, 노숙인 취업지원 등을 위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운영비를 보조해 취약계층에 무료로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관리·감독도 중요한 역할

김영현 사무관은 한국고용정보원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고용보험전산망, HRD-Net과 같은 고용정보망을 관리하고, 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수급전망 및 고용동향조사, 직업지도·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등 고용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관련 연구 기능도 강

화되고 있으니, 김영현 사무관의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한은숙 사무관, 김병성 주무관, 진철 주무관은 고용서비스정책을 총괄하고, 고용센터는 물론 예산·홍보 등 전반을 담당한다. 구석구석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박근화 실무관과 한현숙 실무관은 일정과 회계를 꼼꼼히 챙기는 살림꾼이다. 김병화 전문위원은 고용서비스정책의 토대가 되는 취업통계를 책임지고 있다. 양정열 과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따뜻함으로 직원들을 이끌고 격려한다.

이와 같이 고용서비스정책은 마이크로(Micro)와 매크로(Macro)를 겸비해야 한다. 고용센터를 직접 챙기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다가가기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장과 맞닿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워크넷 화면을 이렇게 바꿔 보면 구직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시스템을 바꾸는 경우 현장의 고용센터 직원들과 구직자와 기업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정책적 마인드와 거시적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 즉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노동시장과 고용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를 고용서비스와 연계하고, 법적·제도적 개선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내 일(job)을 찾으면 내일(tomorrow)이 보인다’고 했던가. 일자리 고민을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일’을 찾아주기 위해 오늘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원들은 열심히 뛰고 있다. 박경

글 한은숙 사무관

그 사람의 하루

중 3 아들이 영화 '씨니'를 보고 왔다. 그 영화를 본 이유는 친구들과 시험이 끝나고 몰려간 극장에서 '트랜스포머'도 '해리 포터'도 시간이 맞지 않아 서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걸그룹의 새 앨범 컨셉이 복고풍 씨니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시대인 이 21세기에 복고가 된 1980년대 패션과 음악은 그 아들의 엄마의 시대였고,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 아들보다 한발 늦게 영화관을 찾아 씨니를 보던 엄마의 눈에선 영화 시작부터 눈물이 흘렀다.

영화 시작에서 눈물이 흐른 것은 그 시대가 그림자거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영화는 지금 현재에서 시작한다. 남편과 아이를 깨우고 각자 다른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말 한 마디 없이 아침을 먹는 남편에게 입원해 계신 장모 병원 좀 가보라는 민구한 잔소리를 하고 아침을 손도 안 대고 등교하는 딸 뒤통수에 걱정의 말을 보내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어도 결코 그 순간 아침을 차려 내놓는 여인의 마음과 몸을 헤아릴 리 없는 그들이 나가고 나면 여인은 '휴우' 한숨을 내쉬며 아이가 남긴 토스트를 베어 물고 비로소 창가에 앉는다. 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장면은 거기부터였다. 그들은 그들, 나는 나인 세상살이 그 자체의 고독.

그 고독은 비슷한 연배의 같은 성의 친구여도 별반 해소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 결혼 이후 줄곧 바깥일을 해온 나로서는 주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친구를 만날 때 무슨 얘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할 때가 있다. 관심사도 다르고 생활도 만나는 사람도 다르니 공통의 화제가 적은 것이다. 어느 날 한 선배와 밥을 먹다가, 이런 경우를 포함해 화제를 찾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선배의 방법은 아주 훌륭했는데, 자신은 그 사람의 하루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아침을 시작했고 어떤 오전을, 오후를 보낼 것이며 누구와 어떤 밥을 먹을까를 생각하다 보

면 누구든 나름의 고단함과 고달픔이 있어 다 안쓰러워진다는 것이다. 그 안쓰러움이 이야기를 이끌며 그러다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사람의 하루. 이후 나도 의식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하루를 진심으로 생각해 보려 애썼고, 그리고 보니 모든 사람의 하루가 눈물겨울 수 있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영화는 내가 생각했던 친구의 하루 시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아침을 정신없이 보내고 점심도 남은 밥에 반찬으로 대충 먹고 오후를 보내다 오랜만의 외출이라는 기대감과 옛 친구에 대한 반가움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나온 친구. 그렇게 상대의 하루를 생각해 보면 각각 집안일과 집 바깥일을 한다는 다른 처지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같은 역할 등이 생각나며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 그녀의 하루는 또 하나의 나의 하루가 됐다.

영화는 함께 사는 가족들이 다 보지 못하는 여인의 현재 일상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그녀 자신조차 잊고 있던 그녀의 과거로 함께 간다. 그녀는 비로소 그런 자신만의 과거를 가진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섬기는 남편과 아이만이 아니라 자신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닌 '어머어마한' 존재라는 자각이 그녀의 현재를, 그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해준다.

그 사람의 하루 중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닌 훨씬 많은 시간들, 나 또한 어머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그의 시간들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결국 하루 같은 인생길 함께 가고 있는 중에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끔이나마 실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만남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나와 관계



유정아

방송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위원
jayoo7@snu.ac.kr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 9시 뉴스', '열린 음악회' 등을 진행했다. 1997년 퇴사 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KBS 1라디오 '명사초대석'과 국회방송 '원로에게 듣는다'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정아의 클래식 에세이, 마주침,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 등이 있다.



소비자의 힘으로 고물가 파고 넘는다

물가가 심상찮다. 7, 8월 집중호우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올랐다. 100원 할인조치가 끝난 기름값은 리터당 2천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리뉴얼·프리미엄 상품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얼마를 기록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오르기만 하는 물가를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 『나라경제』는 고물가 시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 다양한 알뜰소비정보와 함께 알아보고,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 주권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집중 조명해 본다.

이달의 이슈

소비자의 힘으로 고물이 파고 넘는다 | 도입

물가전쟁, 소비자는 방관 중

연 초 유치원 관련 단체들은 수업료 동결을 선언했다. 그런데 2월 소비자물가 중 유치원비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나 뛰었다. 수업료는 동결했지만 영어교습 등 특별 활동비, 교재비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면·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업체들은 기존 제품보다 가격을 올린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들을 쏟아냈다.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양이 늘었다는 명분이 덧붙었다. 하지만 정부와 소비자들의 시선을 피해 나가기 위한 '우회 가격인상'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인삼물이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한 '9.9% 가격인상',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금요일에 인상 발표가 잦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타난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적발되는 기업도 늘었다.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가격은 올려야겠는데 혼자 올리자니 매출이 줄까 걱정돼 담합에 나선 곳들이 많아진 탓이다.

올 들어 정부와 기업 사이에 벌어진 이 같은 '숨바꼭질'은 우리 물가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말 이후 물가를 끌어올린 주역은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였다. 이를 대부분 해외에서 사다 쓰는 우리 형편상 가격인상의 충격을 온전히 피해나가기란 불가능하다. 또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6.2%의 '고성장'을 했다. 오랫동안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돈도 많이 풀려 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여건이다.

반면 이를 억제할 수단은 제한돼 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환율 등 거시수단으로 화끈한 '고공폭격'을 퍼부어 기선을 제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막대한 가계부채, 여전히 불안한 세계경기가 발목을 잡는다. 잘못하다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동원하고 있는 건 수급조절, 할당관세 인하 등 '미시

대책'과 업계를 향한 '심리전'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도대체 뭐 하나냐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물가 문제만 나오면 되풀이되는 논란이다. 아쉬운 점은 전면에 나선 정부와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움직임과 역할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신라면 블랙'이 그렇다. 한편에선 '숨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다른 한편에선 '과장 광고를 문제 삼아 가격인하 압박을 한 것'이란 불만이 나왔다. 또 물가 고통이 커지는 속에서도 시장에선 '합리적 소비'와는 거리가 먼 행동들도 자주 관찰된다. 쌀값이 오르는데도 마트에선 햅쌀만 팔린다. 통신비·교육비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통신 과소비는 여전히 과소비 시장도 위축될 기미가 없다.

'물가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퍼져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이것이 임금상승으로까지 이어져 구조적 인플레이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 물가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동네 미용실, 칼국수집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 결국 '소비자의 압력'이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도 '소비자의 힘'이 제대로 조직되고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정보가 보다 빠르고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달의 경제



조민근
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자
jming@joongang.co.kr

‘똑똑한 소비자’를 넘어 ‘현명한 소비자’로

모든 영리기업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기업은 고도의 마케팅기법을 활용해 가격인상 담합에 참여하기도 하고, 편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도 하며, 과도한 유통마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리뉴얼·프리미엄 가격을 주요 마케팅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 마케팅전략의 대상에서 소비자들이 벗어나기 위해선 똑똑한 소비자를 넘어서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업의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가격인상을 하는데 그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들 전략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것

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 가격인상 담합 사례다. 모든 상품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형성돼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줄어 들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독과점 시장에선 이러한 원리가 지켜지지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컵커피의 가격담합 판정, 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동원 데어리푸드의 치즈제품에 대해 내린 가격담합 판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편법 가격인상 사례다. 이는 부가가치세 별도, 삼겹살 중량 줄임, 무료 제공되던 군만두 서비스 줄임, 치킨이나 피자에 제공되던 리필서비스 중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격을 올리고, 가전·전자업체는 단순한 기능을 추가



한 마트를 찾은 주부가 야채 균일가 코너에서 야채를 고르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업마케팅에 맞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해 놓고 신제품 가격을 올리는 등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다.

셋째, 과도한 유통마진 사례다. 농수산물의 경우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상 마진이 과대 계상돼 생산지 가격과 최종 소비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공산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기업으로 인한 과도한 유통마진 때문인 경우가 많다. 수입차 부품딜러업체의 과도한 유통마진 등으로 건당 평균 부품대가 국산차의 5.3배에 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넷째, 리뉴얼·프리미엄 가격 사례다.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 때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 리뉴얼과 프리미엄 전략이다. 리뉴얼전략은 라면·제과·제빵 업체들이 제품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고, 프리미엄전략은 고급화·고가로 양질의 원료를 사용해 가격을 대폭 올리는 전략이다. 농심이 '신라면 블랙'이라는 신제품을 고가격전략으로 출시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판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섯째, 오픈프라이스의 폐지 사례다. 오픈프라이스는 소비자예겐 현명한 소비를 위한 계기가 되고, 제조업체에겐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되며, 유통업체에겐 저렴한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도였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 결정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가고 이들이 마진을 줄이면서 가격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업체 간 담합, 제조업체의 직접 판매 등으로 인해 예상했던 만큼의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라면·과자·아이스크림·빙과류 등 4개 품목에서 실시되던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지난 8월 1일부터 폐지했다.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참여해야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정부는 물가를 직접 관리하는 정책보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장은 독과점의 특성이 강하므로 독과점 시장의 행위규제, 유통구조의 선진화,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형태의 미시적 정책이 필연적이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정유업체가 과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유업체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불법적 담

합으로 가격을 인상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책정돼야 에너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즉 정부는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가격이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구매행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의 품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정식품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상당기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의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인상 자체를 목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선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과징금 외에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가 실질적인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오픈프라이스제도를 포기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재 편의점 판매 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오픈프라이스 시행 이전에도 할인판매를 통해 판매가를 낮췄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과 달리 편의점은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는 인터넷쇼핑몰과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 파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소비자들의 대항력이 약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 소비자 파워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소비자구매가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소비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오장균
한국소비자교육원 이사,
성결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jkoh128@naver.com

주유소 사은품 '공짜' 아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석유시장감시단을 조직하고 휘발유 가격조사를 실시한 지 2년이 되고 있다. 감시단은 민간 주도의 '워치독'(watch dog) 활동을 통해 석유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석유가격 모니터링 및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의 가계비 지출 중 9.2%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통비이고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휘발유 가격이다. 휘발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 원유 가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문제는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이다.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를 때는 쏠살같이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서 내릴 때는 왜 거북이 타령이냐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매일 뉴스 말미에 오늘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얼마라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두바이유 가격이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이다.

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실제로 휘발유를 넣으면서 주유소의 가격표시 적정성 여부, 사은품 종류,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등의 다양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는 휴지·물·캔커피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주유소와 전혀 제공하지 않는 주유소 간에 휘발유 가격 차이가 현저했다는 점이다. 즉 사은품은 공짜가 아니라 이미 휘발유 가격 안에 포함된 것이었다. 따라서 감시단은 사은품 제공보다 소비자에게 직접 가격을 할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감시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비싼 주유소와 가장 싼 주유소 각각 10개씩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비싸다는 주유소가 1등의 오명을 벗기 위해 10원이라도 내리

는 것을 보면서 소비자 선택의 몫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도 감시단은 시장이 투명해지고 가격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끝으로 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유가정보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동네에서 가장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가 기름을 넣는다.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주유 시 할인되는 카드를 꼭 챙긴다. 카드사들은 기름값에 민감한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주유할인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카드들을 잘만 이용하면 기름값도 할인받고 포인트도 적립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경제운전을 생활화한다. 급출발·급제동 안하기, 내리막길에선 가속페달에서 발 떼기, 트렁크 비우기,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등 평소 운전습관도 기름값을 아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불필요한 운행을 삼간다.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까운 거리까지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운행만 삼가도 기름값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다섯째, 냉방과 난방은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냉·난방은 자동차 엔진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나친 냉·난방은 엄청난 연료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에어컨은 시속 40km 이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jhkim6194@hanmail.net

이달의 이슈

소비자의 힘으로 고물이 파고 넘는다 | 인터뷰

“내 별명이 ‘홈파티의 여왕’입니다”

추효경 주부

긴 장마와 폭우, 태풍으로 과일값과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만큼 가정경제를 책임진 주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주부경력 14년차인 추효경 주부(서울시 답십리동)를 만나 어떻게 가정경제를 꾸려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지어나?

안 쓰고 안 먹고 버티기 중이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올해는 특히 과일값이 비싸다. 올해 들어 수박을 한 통밖에 못 사먹었다. 애들에게 비싼 수박 대신 썬 바나나만 사주고 있다. 안 오른 게 어디 있어야지. 농산물, 공산품 할 것 없이 다 올라 장보러 가는 게 매번 전쟁이다.

결혼 14년차 주부로서 나를 정보는 비법이 있을 것 같다.

필요한 것은 목록을 정해 한꺼번에 사고, 품목에 따라 장을 보는 곳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청량리종합시장을 이용하고 삼겹살은 코스트코의 벨기에산을 사며, 아이들 옷은 아울렛매장인 바우하우스를 이용한다.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적어도 시장을 두 바퀴 정도는 돌면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사는 편이다.

외식은 자주 하는 편인가?

내 별명이 홈파티의 여왕이다. 아이들 간식부터 남편 술 친구 모임까지 모든 것을 핸드메이드로 집에서 해결한다. 처음에는 절약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표 음식을 아이들도, 남편도 더 좋아한다. 남편 술친구 모임은 더 간단하다. 과메기처럼 메인요리를 1~2개 준비하면 된다. 가족 간

의 모임일 경우 각 가정에서 한 가지씩 음식을 장만해오는 방식을 쓴다. 부담도 적고 각 가정의 손맛도 느낄 수 있어 좋다.

정부도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부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물가는 날씨가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나 언론이 물가 오른 것만 얘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배추파동 당시 배추 가격은 폭등을 했지만 얼갈리·열무·알타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배추가 올랐다는 얘기만 있지, 배추 대신 열무나 알타리를 먹으라는 소리는 없더라. 생선도 마찬가지다. 서민 대표생선인 고등어 가격이 엄청 올라 요즘 밥상에 고등어 올리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콩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주부들이 지혜로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언론이 이런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대안도 안 주고 올랐다고만 하면 주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주부들이 불안해서 소비를 안 하면 누가 문제인가?

다른 주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동대문구에서 고질적인 민원자로 찍혀 있다. 생활 속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민원을 넣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고질적인 민원인이 돼 있더라(웃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민원을 넣을 거다. 조금씩 내 주변의 환경이 좋게 바뀌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편법 가격인상, 사재기 등과 같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주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명색이 가정경제의 CEO 아닌가? 나라경제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새고 있는 '통신 꼭지'를 잠그자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 시대가 열렸다. 단순한 음성통화용으로 쓰이던 휴대폰이 말 그대로 '손안의 컴퓨터'로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만큼 늘어난 통신비용은 부메랑이 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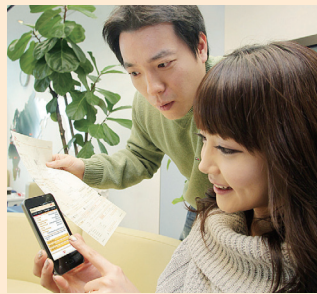
통계청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통신비 지출액은 가구당 13만8,600원으로 전

년 대비 4.7%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분기 통신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단말기 구매 비용이 높아지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이용으로 통신서비스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 통신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반문해야 할 것은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힘써본 적이 있는가다. 통신사업자가 마련한 요금인하안에 더해 통신비 지출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주유소 기름값을 예로 들어보자. 흔히 기름값이 급등하면 출퇴근길 차량정체가 일부 해소된다고 한다. 자가 운전자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서비스는 다르다. 통신비가 늘어났다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휴대폰 사용량을 줄이는 경우는 드물다. 조금 귀찮더라도 요금이 저렴한 집전화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간단한 용건은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



SK텔레콤은 '스마트청구서' 서비스를 지난 2월 21일부터 실시했다.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하고 청구서 장기 보관도 가능해 매월 청구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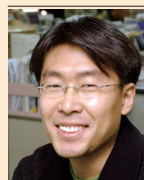
근 보편화된 '카카오톡' 같은 무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종량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결합상품에서도 통신비 절감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혹 가족들의 휴대폰이 각기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돼 있지는 않은지, 집에서 쓰는 유선전화·인터넷·IPTV 등이 모두 다른 통신사 상품으로 구

성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뭉을수록 싸다'는 것은 통신사의 마케팅 용어지만 실제로 각종 통신서비스 상품을 한 회사로 모으면 요금이 40~50%씩 내려간다.

매달 나오는 통신요금 명세서만 꼼꼼히 살펴도 소리 없이 새는 통신요금을 막을 수 있다. 흔히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딱 두 달만, 세 달만'이라는 판매사원의 말을 듣고 이런저런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 그런데 두세 달이 지난 후 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소비자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적게는 월 2천원~3천원, 많게는 1만원 가까운 돈을 고스란히 통신사에 안겨주는 셈이다.

매달 통신비가 늘어난다고 불평만 늘어놓아선 해결되는 것이 없다. 자신의 통신서비스 이용습관과 가입상품을 되짚어 보면 매달 요금청구서를 보고 미소 짓는 날이 올 것이다. ▶



이호준
전자신문 정보통신팀 차장
newlevel@etnews.co.kr

이달의 이슈

소비자의 힘으로 고물이 파고 넘는다 | 온라인거래

최저가 미끼 인터넷쇼핑몰 주의!

‘온라인쇼핑’은 이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의 매출을 앞설 정도로 대중화됐다. 여기에 2010년부터 시작된 ‘소셜커머스’ 열풍은 가격과파를 무기로 외식 등 무형의 서비스 분야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는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되는 소비자불만 상담 중 30% 이상이 온라인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많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라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매년 30~40%씩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거래에서의 이러한 거래 위험은 근본적 문제이기도 하다. 온라인거래는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금을 먼저 내는 ‘비대면 선불거래방식’이고, 사이트상에서 최대한 잘 보이게 꾸민 것이라 실제 상품과 차이가 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거래 특성에서 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쇼핑몰사이트 초기화면에 밝혀야 한다. 선불거래의 안전을 위해 에스크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제도도 의무화돼 있고, 구매 후 7일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구매계약을 철회하는 청약철회도 보장된다. 그럼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다거나 배송이 지연된다’, ‘청약철회나 환불이 안 된다’와 같은 소비자피해는 왜 매년 증가하는 것일까?

온라인거래는 오프라인에 비해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거래사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쇼핑몰을 만든 후 검색어 광고나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주문만 받아 놓고

며칠 만에 사라지는 사기사이트들도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몇 만원 할인해 준다는 말에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가 물품을 받지 못해 수백만원을 손해본 경우도 많다.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들은 싸게 구입하는 것 못지않게 안전한 쇼핑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대형쇼핑몰과만 거래할 수도 없다. 가격도 싸고 독특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쇼핑몰도 많으니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두자.

첫째, 가격에만 현혹되지 않는다. ‘최저가’는 미끼일 수 있으니 사업자가 믿을 만한지 알아본 후 거래한다. 둘째, 사업자정보를 확인한다. 사이트상에 사업자명, 통신판매신고번호, 주소 등이 기재돼 있는지, 해당 정보가 정확인지 확인한다. 셋째, 사업자와 연락이 잘 안 되는 쇼핑몰은 피한다. 통신판매신고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만 알려주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넷째, 결제는 가능한 신용카드로 한다. 현금 이체의 경우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청약철회를 할 때 환불받기 어렵다. 다섯째, ‘반품·환불 안 됨’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사진상으로 보는 상품이 실제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본인의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많다. 여섯째, 충동구매는 피한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노출돼 있는 상품광고에 유혹을 느낄 때가 많다. “싸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구입하면 후회하게 된다. 나리경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emonitor1@hanmail.net

소비자피해요? '1372'가 가장 빠릅니다

한 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창구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가격폭리나 바가지요금 문제뿐 아니라 구입 제품의 고장, 성능미흡에서부터 안전사고, 사업자의 약속 불이행, 고의적 시기행위에 이르기까지 마치 이 시대 우리들이 겪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하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1372'로 전화해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1372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다. 이 통합상담센터에는 전국의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 찾도록 판례 등 정보 제공

1372로 전화하면 4개의 상담 분야를 안내한다. 1번은 자동차, 2번은 의료서비스, 3번은 금융 및 보험, 4번은 기타 모든 품목이다. 소비자가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상담센터의 콜 서버시스템이 전화를 한 소비자의 지역을 인식해 해당 지역의 상담기관 중 유희 라인에 연결한다. 만약 모든 회선이 상담 중일 경우엔 제1인접지역, 제2인접지역순으로 탐색해 최대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상담원과 통화한 모든 상담내용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돼 향후 소비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상담원은 우선 소비자의 피해상담을 청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알려준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1차적인 방법이 본인에 의한 구제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나 분쟁사례, 판례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주장임에도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

부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해당 상담원이 사업자에게 연락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는 피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해처리를 통해 해결이 안 되거나 당사자 간 다른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선 소비자로부터 직접 접수되거나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된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시험검사·합의권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즉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며, 동 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 후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만약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사업자의 부당거부로 조정 불성립 시 법원 소송 지원

이상과 같은 과정이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피해구제 절차다. 소비자피해는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소비자보호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업자의 정당한 이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부당하게 거부해 피해구제 절차가 행정낭비되는 곤란하다.

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구제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 사업자의 부당한 거부라고 판단되는 사건

은 소비자를 위해 법원 소송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피해구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사건 ①

(사건 개요)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김 모 씨(여)는 2011년 1월 14일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학습사이트에 문의하자 직원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회원에 가입하면 국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등 집요하게 계약을 권유해 48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충동계약을 후회하고 취소를 요구했지만 국비신청자는 취소가 안 된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다. 1372 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고 교재도 보냈지만 수취거절로 반송되는 등 해결이 안 돼 피해구제 접수를 했다.

(처리 결과)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거래다. 방문판매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48만원을 아끼려던 사업자는 검찰에 위법사실이 통보돼 100만원의 벌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사건 ②

(사건 개요) 서울시 봉천동에 사는 강 모 씨(여)는 2011년 3월21일 4개월간 헬스장 이용을 계약하고 8만원을 결제했으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취소해야 했다. 그래서 당일 하루 운동 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거부해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처리 결과) 장래의 특정 기간까지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이런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된다. 계속 거래의 소비자는 중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불량 저울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매장 내 저울의 부정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속거래의 중도해지 시 미도래 금액에서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은 환급해야 한다. 7만 1,300원의 환금을 거부하던 사업자는 검찰에 통보돼 3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추후 조정에 불복할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등을 통해 부당한 거부는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을 실증토록 할 방침이다. 나의 경제



이병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bjlee@kca.go.kr

美 『컨슈머리포트』 상품선택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가격인상, 인플레이, 물가 불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소비자를 대표하는 각종 소비자단체들은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소비자들은 가격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고 가격상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美 소비자, 합리적 소비 통해 시장가격 좌지우지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 및 각종 소비자 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토대로 매우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최대 소비자단체인 미국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소비자정보잡지인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 등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 선택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격인하 또는 가격경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연간 72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컨슈머리포트』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10대 잡지다. 매달 다양한 상품의 성능과 가격 등 비교분석정보가 제공돼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영국 소비자협회(CA)가 발행하는 『Which?』의 구독자는 50만명을 넘는다. 영국 소비자협회의 소속직원은 400명으로 웬만한 기업 규모다. 그리고 프랑스 소비자연맹(UFC)은 소비자잡지인 『크 슈아지』(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발행하고 있는데 매달 23만부 정도 팔린다.

이에 비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행하는 『소비자시대』의 구독자는 2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자정보활용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상품을 살 때 정보를 구하지 않으며 또한 정보를 얻는데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또한 미국 소비자들은 『컨슈머리포트』 외에 소셜커머스, 아이폰 등에 설치된 가격정보 관련 앱을 이용해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추구하고 있다. ‘TGI Black Friday’라는 이름의 애플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전단지광고를 추적해 상품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비교 애플은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인터넷 가격이 나열되는 방식인데, ‘TGI Black Friday’ 애플은 각 매



지난 2010년 8월 9일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2011년형 자동차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표지모델 차량으로 현대차 신형 쏘나타를 내걸고 미국 내 판매되는 280개 모델(2011년형)의 차량 소개 및 성능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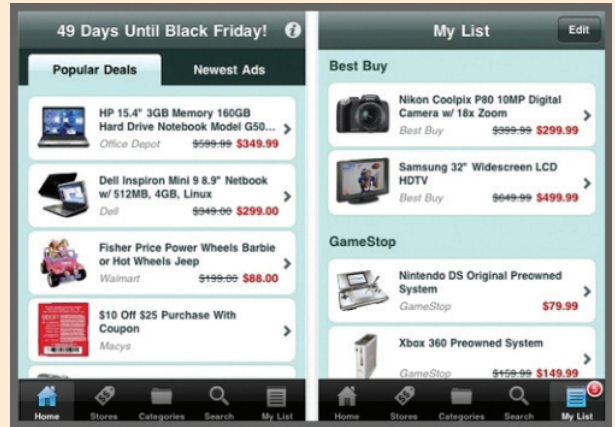
장에서 배포된 전단지 정보가 저장돼 유통매장에서 휴대폰 광고사진만 보여주면 'Black Friday'(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진다고 하는 날로, '검다'는 표현은 상점들이 이날 연중 처음으로 장부에 적자 대신 흑자를 기재한다는 데서 연유함)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The Find'라는 가격 애플도 있다. 이 애플을 활용하면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가격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적 조치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가격왜곡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유럽은 단체소송제도 운영)를 운영해 소비자가 부당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니 기업의 가격정책에서 담합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담합 행위는 경쟁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거래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견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미국처럼 가격담합 등을 포함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 진출해 성공한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해외엔 낮은 가격에 수출해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인정해 어느 정도 모른 척해 왔다. 보증수리 기간에서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당해도 참아 왔다.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철저한 감시 및 견제가 제대로 돼 오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격경쟁, 물가안정 등을 꾀하기 위해선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각종 가격정책은 물론 가격정보로 무장한 똑똑한 소비자들의 힘으로 가격안정, 가격경쟁촉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소비 분야에 생활협동조합 결성돼 있는 유럽

최근 국내에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창조하고 소비자로서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소비생활협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엔 인천에서 최초로 통신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출범되기도 했다. 소비생활협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상품테스트에 기초를 둔 품질과 가격에 대한 항의운동,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상품



최근 단순히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수만 가지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쇼핑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TGI Black Friday'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금지·불매·고발 운동,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반대운동, 소비자 입장에 선 상품 공급기관 창설운동,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구입운동 등의 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하나같이 생활협동조합 천국이고, 미국의 경우 각종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억 2천만명에 달할 정도인 반면 국내의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전체인구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협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분야가 식품·의료 부문에 한정돼 있는 등 아직은 초보 단계다. 그러나 비록 초보 단계라 할지라도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이 항의하거나 불매하는 기존 소비자운동과 달리 공동구매·직거래 등 경제행위를 통해 '시민 소비자' 욕구를 해결하는 생활협동조합 방식이라면 기대해볼 만하다.

2004년 이탈리아에서 생활협동조합이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맞서 반값 분유를 시장에 내놓았고, 1970년대 일본에서 컬러TV에 잔뜩 낀 가격거품을 걷어낸 일등공신이 생활협동조합이었다. 자율과 자립, 자조와 협동의 원리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대안적 영역인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박경옥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학과 교수
kohuh@sungshin.ac.kr

고물가, 소비자 주권의식으로 해결하자

최 근 소비자들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는 소비자의 안정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다. 따라서 고물가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소비자 권리 누리려면 각자 책임도 다해야

이미 우리 소비자들은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비자주권 시대를 살고 있다. 그동안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소비자 관련 법과 제도 등은 소비자주권론적 입장으로 많이 전환됐다.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려면 시장의 경쟁질서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확립돼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보를 잘 활용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비자능력이 함양돼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의식을 기초로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행사

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 8대 권리가 제시돼 있다. 하지만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로서 각자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 소비자의 책임 내지 시민의 역할에 관해 「소비자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지난 7월 농협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실시된 '알뜰 장보기, 합리적 소비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에서 소비자 단체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수산물로 만든 요리를 시식하고 있다.

다해야 한다.

소비자 주권의식을 높이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고물가 시대를 맞아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 최근 마트에선 값싼 수입산 식품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며, 이는 수산물·농산물 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 가벼운 지갑상황 때문에 값싼 식품이나 제품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소비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아울러 품질을 양보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도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등 제품 가격에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가격인상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할인행사·부당광고 등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소비자의 공동체 의식 등을 기초로 소비자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소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소비자정보 활용하면 가게 부담 줄일 수 있어

그렇다면 고물가 시대 합리적인 소비태도는 무엇일까? 첫째,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상승해 마트가기가 두려울 정도다. 하지만 이런 상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다. 주변의 소비자정보가 돈인 것이다.

현재 많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어려운 소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물고기 밥상' 블로그(www.mulgogibabsabng.com)를 개설해 수산물 가격, 수산물을 이용한 요리레시피, 할인행사 정보, 물가일일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가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적극적으로 소비자교육을 받는다. 최근 기업의 제품가격 상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저가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도 많아 값싼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을 올바르게 판단해 적절한 품질과 적절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소비자교육은 바로 올바른 소비자 지식과 합리적인

소비자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 합리적 소비가 이뤄지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라 소비자들의 전기 낭비가 심하다. 또한 원유가 상승 및 물가 상승 등은 점차 공공요금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우리 가계 소비생활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여러 생활부분의 절약은 고물가를 견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알뜰 장보기,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으로 소비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자.

한편, 고물가 시대 건전한 소비를 위해선 소비의식의 전환도 중요하다. 우선 소비자들은 소비생활의 주체임을 명심한다.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소비자다. 현재 고물가의 어려움은 소비자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이겨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정부와 기업에만 떠맡기고 원망만 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비자들은 항상 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욕망이라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소비자들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설령 현재 자원이 풍부하다 해도 미래를 위해 신중한 소비를 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 문제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바로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점, 예컨대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은 많이 팔리고, 선호하지 않는 제품은 비 인기 품목이 돼 시장에서 퇴출되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품생산의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선 소비자들의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또한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편에선 자신의 소비를 마치 자기 지위나 위신을 내보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과시소비를 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이제는 자신의 현실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현실에 맞는 소비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경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lchung@konkuk.ac.kr

이달의 이슈

소비자의 힘으로 고물이 파고 넘는다 | 도움되는 정보

‘오피넷’은 알겠는데, ‘T-프라이스’는 뭐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 주유소가 궁금하다면 오피넷(www.opinet.co.kr)을 쳐보자.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사이트로 전국·지역별·상표별 평균휘발유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지역별 주유소를 검색하면 그 지역 주유소들의 가격을 한눈에 알 수 있어 가격비교가 가능하고, 불법 거래업소 여부도 알려준다. 오피넷 앱을 다운받으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평소 자주 가는 마트가 주변 다른 판매점보다 싼 곳인지 알고 싶을 땐 한국소비자원의 ‘T-price’(price.tgate.or.kr)에 들어가 보자. 대형할인점, 백화점, 전통시장 등 165개 판매점의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100여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최저가 검색도 가능하다. ‘T-price’ 앱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트에서 산 삼겹살이 믿을 만한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www.hqbrand.net)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우수 축산물브랜드는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의 모임’과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소비자가 지역별 우수 축산물브랜드의 제품 특징과 판매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를 원할 경우 해당 브랜드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제품 구매도 편리하다.

구매하려는 식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보려면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www.

| | |
|-------------|--------------------|
| 유가정보서비스 | www.opinet.co.kr |
| 생필품가격정보 | price.tgate.or.kr |
| 우수축산물브랜드 정보 | www.hqbrand.net |
| 식품이력정보 | www.tfood.go.kr |
| 제품안전정보 | www.safetykorea.kr |
| 안전온라인쇼핑몰정보 | www.emonitor.or.kr |

tfood.go.kr)가 유용하다. 식품의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식품이력 추적은 매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매장에 설치된 키오

스크(Kiosk,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에 식품이력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식품이력 추적도 가능하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한국소비자연맹의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www.emonitor.or.kr)을 두드려보라.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절차를 밟아준다. 지역별로 통신판매업자 정보, 청약철회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쇼핑을 하기 전 미리 방문한다면 후시라도 있을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기의심 쇼핑몰, 소비자피해 다발업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우리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안전한 것인지는 세이프티코리아(www.safetykorea.kr)에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세이프티코리아는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인증검색 사이트다.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 품목명 등을 입력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또한 시판되는 제품 중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물론 불법제품 신고도 가능하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제품안전 위해·위험 대처 사례도 소개돼 있다. 기획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외동이는 외롭다

보통 우리 나이쯤 되면 손자나 손녀를 한두 명씩 두고 있다. 갓난아기를 보살펴줘야 하는 수고도 있지만 대부분 손자 재롱에 넋을 잃고 만다.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람 사는 재미를 새삼 느낀다.

요즘 아기는 온 가족의 축복과 아단법석 속에 태어난다.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가 속한 직장에서도 대부분 출산장려금과 출산 휴가를 주면서 축하해 준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 아이가 너무 많이 태어나서 걱정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얼마 안 되는 동안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소중한 삶의 시작 단계에서 가족과 친지는 물론 사회의 환영을 한 몸에 받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요즘 아기들은 참 복이 많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스친다. 예를 들어 그렇게 좋은 자식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식을 두는 데 왜 그토록 인색할까? 막상 낳아 보면 더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걸 알 텐데. 왜 결혼을 주저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외동으로 만족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키우는 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 여러 모로 애로가 많다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맞벌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기를 더 낳는 단 말인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수준이 낮았던 과거보다 소득이 높아진 요즘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혼자서 주위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이는 앞으로 갈수록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끝내 이겨내야 하고 불법과 비리에는 당당히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험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혼자서 자라는 외동이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형제자매가 함께 뒹굴며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경쟁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지혜를 어릴 적부터 체험하도록 하고, 나아가 삼촌, 숙모, 외삼촌, 외숙모, 이모, 고모, 사촌 등 가까운 인척과 정을 주고받으면서 자라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자식이 소중할수록 아이의 장래를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당장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부모의 이기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래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는, 다시 말해 영웅이 없는 세상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한 개개인이 모두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는 SNS의 확산으로 개인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무슨 일이라도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래에는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사람과의 융합, 통섭 또는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짐으로써 A자형 인간(한 분야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 미래형 인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세상을 리드해 나갈 우리의 아이들을 어떠한 환경에서 키워야 할지를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겠다.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말이다. 미래
경제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회장

yilee2020@hanmail.net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무부 증권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후 2009년 세계미래포럼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저·역서로는 「시민을 위한 경제이야기」, 「미래와 세상」, 「미래진단법」 등이 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첫 상장하는 기업 되고파”

박상덕 메자니아이팩(새터민 사회적기업) 대표

언제 그렇게 폭우가 내렸나 싶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 파주 월릉면 덕은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메자니아이팩을 찾았다. 여기서기 종이재자가 바쁘게 오가고 한 귀퉁이엔 완성된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다. “무척 덥네요”라는 인사말에 “아이고, 비 많이 올 때는 공장 떠나려갈까봐 집에도 못 갔어요” 웃으면서 기지를 맞는 이, 박상덕 메자니아이팩 대표(50세)다. 박스 제조와 영업, 관리에 이르기까지 업계에서 십수년 노하우를 쌓은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간단했다. 사회적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

박스 제조업체 메자니아이팩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5억원, SK에너지가 1억5천만원을 투자해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이곳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 당초 새터민들의 정착을 돕던 열매나눔재단은 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고, 단순한 기술로도 금세 작업이 가능한 박스 제조를 선택했다. 2008년 5월 파주에 400평 규모의 공장을 짓고 새터민 20여명을 고용해 문을 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회주의 체제가 익숙한 새터민들에게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거래처를 뚫을 영업력도 없었다. 매달 수천만원씩 적자를 기록하면서 6개월을 보내는 과정에서 공장을 떠나는 이들도 생겨났다.

재단은 수소문 끝에 지금의 박상덕 대표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했다. 공장을 둘러본 박 대표는 문을 닫는 게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김동호 열매나눔재단 이사장의 간곡한 부탁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박 대표는 지금의 메자니아이팩으로 들어왔다.

주문만 하세요, 어떤 박스든지 척척!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새터민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하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배우는 것도 많고 보람도 많이 느낀다. 내 나이 이제 지천명,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에 북한 탈북자 수는 약 2만명. 그중 정상적으로 정착하는 사람은 25%가 채 안 된다고 한다. 그만큼 새터민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박 대표는 적자를 흑자로 돌려 이 일자리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기존의 단순 임가공 업무에서 탈피, 박스 전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바뀌 마진폭을 높였다. “모든 종류의 박스를 다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췄다. 상당부분 자동화가 됐지만 여전히 손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박스도 있다. 실력이 곧 경쟁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의 경험을 살려 발로 뛰며 거래처를 뚫었다. 녹십자, 신한다이아몬드, 농협중앙회는 물론 청와대로 납품하는 고가의 박스도 있다. 박스 구입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모양의 박스를 여러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그 수고를 덜어 주니 메자니아이팩과의 거래가 편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2009년 사업 첫해 21억3천만원, 2010년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4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9년 6월 사회적기업 인증도 도움이 됐다. “통일부에서도 새터민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고용노동부 지원이 좀 더 많았다. 인증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됐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더 봐주는 건 없더라(웃음). 그간 일하던 지식을 활용해서 저리 대출도 받고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나 우리 회사와 제품을 알렸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립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박 대표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보면 3년이라는 지원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우가 일하는 곳,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새터민이 주인되는 회사, 곧 만나게 될 것”

현재 메자니아이팩 직원은 33명. 이 중 80%는 새터민을 포함한 장애우,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다. “비교적 단순업무가 많다 보니 기술은 금세 익힌다. 물론 분야마다 20년 넘은 기술자들이 기계는 다뤄준다. 이제 어딜가나 인정받는 성실새터민, 모범새터민들이 다 됐다. 하하하” 지금의 웃음 이면엔 많은 어려움이 숨어 있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웠다. 적당히 일해도 똑같이 배급받는

환경에서 자란 탓에 조금만 힘들면 나오지 않았다. 경쟁에 대한 반감도 심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수당을 더 많이 받는 직원을 되레 따돌리기 일쑤였다. 어떤 직원은 왜 누가 월급을 더 받냐고 따지기도 했었다. 그는 “이건 아니다 싶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월급을 알고자 하거나 알려주는 사람은 감봉조치 하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본보기를 보였더니 그때부터 다들 쉬쉬하더라. 비밀리에 월급이 지급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다. 경쟁을 배우는 데 한 3년 걸린 셈이다”라고 말했다.

직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박 대표는 조희시간마다 사선을 넘어온 이들의 정신력을 칭찬하고 훗날 통일이 됐을 때 고향친구들과 만날 날에 대한 꿈을 제시했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한 직원 중 한 사람은 1년간 열심히 일해 복의 가족들을 데려 왔다. 또 1년간 일해 월세 임대주택을 전세로 바꿨다. 올해는 승용차를 구입했다. 박 대표는 그런 그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처음엔 직원들이 집에 잘 갔나 매일매일 퇴근 후 전화했었다. 힘든 일은 없는지 묻고 챙겨주고 하니 형처럼, 오빠처럼 친해졌다. 다들 ‘난 사장님하고 친한 사이야’ 라는 생각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 단, 일대일로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스스로 터득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삶, 후배 사회적기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사회적기업가하면 대부분 열정이나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실제 그것만 갖고는 기업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다. 사회적기업가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여야 한다. 또 영업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손을 벌려야 한다”라면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하려면 정부는 물론 대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메자니아이팩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목적도 충분히 이뤄서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되길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사주를 통해 직원들이 주인 되는 직장을 만들 계획이다. 새터민이 주인인 회사, 곧 만나게 될 거다. 최종 목표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상장을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박 대표 인터뷰

“지금 만드시는 게 ‘제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도울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정부·지자체·지원단체·대기업 사회공헌 파트 등 묻는 이들도 다양하다. 처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구구절절 많은 대안을 내놨다. 심지어 지원이 필요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실행된 건 거의 없었다. 현실의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요즘은 딱 한 가지만 말한다.

“제품 말고 상품을 만드세요.”

3년 전 온라인쇼핑몰 ‘이로운몰’을 만들 때만 해도 몰랐다. 내 눈에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꽤 좋아 보였다. 당사자들은 물론 지원기관들도 “일부 제품은 품질이 좋으니 판로를 뚫고 마케팅만 하면 잘 팔릴 것”이라고 봤다. 사회적 투자자들을 모아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에서 생산된 것 중 괜찮아 보이는 제품을 골라 판매했다. 글 쓰는 본업을 살려 콘텐츠마케팅도 무료로 제공했다. 시장 반응은 제품마다 완전히 달랐다. 장애인이 만든 ‘셈크래프트 천연비누’, 노인일자리 ‘경주서라벌찰보리빵’,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의 ‘뽕로로 저금통 세트’ 같은 제품은 기사만 써도 매출이 꺾충 뛰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은 사회공헌 자금을 끌어다 공짜 광고까지 해줘도 거의 팔리지 않았다. 제품이 안 팔릴 땐 이유가 있다. 제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없거나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싶지 않은 가격 때문이다. 그럴 때 제품(製品)은 상품(商品)이 되지 못한다. 창고엔 재고가 쌓인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엔 상품기획, 즉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 필요하다. 머천다이징은 제품을 상품으로 만들어준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맛들식품’이 좋은 사례다. 올해로 창업 9년차에 들어선 맛들식품이 폐업의 위

기를 무사히 넘긴 여러 비결 중 첫 번째는 상품 재기획이었다. 영업망부터 뚫고 그에 맞는 상품을 기획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전국 120곳의 ‘화평동왕냉면’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던 (주)해피브릿지와 계약에 성공했다. 납품처 주문에 따라 주력메뉴를 육개장과 갈비탕으로 바꿨다. 월 매출은 순식간에 2천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렇다면 상품기획만 다시 하면 위기에 처한 사회적기업을 살릴 수 있을까? 사회적기업은 매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맛들식품은 구리시 취약계층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8명의 임직원 중 여성가장이 3명, 2명이 저소득가정, 1명이 장기실직자, 1명이 고령자다. 직원들은 “다른 곳에서 급여를 더 준다고 해도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취약계층의 직원들이 서로 기대면서 공동체의식이 높아졌다.

이로운몰 입점 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겪으면서 (주)이로운넷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로운’이란 브랜드를 사회적 가치가 높은 소기업의 공동브랜드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품판매로 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생산자와 공유할 수 있다. 시장조사·제품개발·마케팅의 어려움도 서로 나눌 수 있다. 이로운 소기업들끼리 서로 기대어 어려움을 함께 넘다 보면 공동의 사회적 시장도 커져 있지 않을까? ▶▶▶



이경숙
이로운넷 공동대표
sharing.ks@gmail.com

결제대금예치제 (에스크로제)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물건 먼저”
“나 또한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돈 먼저”

눈앞에서 팔고 사는 오프라인 거래는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뤄진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대부분 선불거래방식으로 먼저 돈을 내고 물건이 배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비자는 항상 거래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보호장치가 필요했다. 2006년 4월 1일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Escrow)가 본격 시행됐다. 시행 5년 반을 맞이한 에스크로제. 탄생 배경과 발전 과정,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나라경제』가 짚어봤다.



신뢰와 안전의 또 다른 이름 ‘에스크로’

인터넷의 발달은 쇼핑에도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사라지게 만든 것. 물건을 사러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사이트를 비교해 가장 저렴한 물건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상품을 팔지 않아도 되니 거래비용은 줄어든다. 클릭 몇 번으로 집 앞까지 물건이 배달되니 편리성까지 갖췄다.

그러나 양자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물건은 값싸고 마음에 들지만 먼저 돈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대금을 지불한 후에 물건을 배송받는 ‘선지불 후배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을 어떻게 믿고 금쪽 같은 내 돈을 맡기나. 온라인 거래는 직접 대면 거래도 아니어서 입금이나 배송확인 등이 어려워 사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2003년 발생한 ‘하프플라자 사건’(가전제품 등 정상물품을 반값에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소비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받은 뒤 도주해 300억원의 피해 발생)은 바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대표적 온라인 사기 사건이다. 인터넷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에 타격을 입은 온라인 쇼핑은 이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사라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라 절실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 1일 결제대금예치제(이하 ‘에스크로제’)를 시행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시행



옥션의 온라인 안전결제대행 서비스 아이페이(iPay)

령을 개정해 에스크로(escrow)라고 불리는 제도를 본격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에 의무 가입토록 해 구매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었다.

에스크로제의 원리는 간단하다.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

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수수료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 서로 믿을 수 없으니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한다. 반대로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제3자가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사기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에스크로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신용카드 거래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현금 거래만 적용된다는 제약조건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게임이나 인터넷 콘텐츠 같은 디지털 재화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7월 29일부터 적용대상 결제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지긴 했지만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도 필요하다.

신뢰와 안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에스크로제,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진다. 나의 경제

“5만원 이상 구매부터 안전장치 가동”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결제대금예치제(이하 ‘에스크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2003년 일명 ‘하프플라자 사건’이 발생했다. 결제대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해 약 15만명의 소비자에게 300억 원의 피해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거래 위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에스크로제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서민층은 현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거래 위험도는 상당부분 줄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제도 시행에 담당자로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보다 이러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을 더 크게 느낀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도를 잘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부터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도입 당시 과도한 규제 비용이 초래된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이 있어 절충안인 10만원에서 출발했다. 기존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제한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0만원 미만 거래가 거래횟수 기준으로 전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구매의 비중이 증가했고 결제대금을 보호할 필요성도 커졌다. 생활필수품 위주의 소액구매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5만원 이하의 거래, 신용카드 지급 거래,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래, 디지털 재화같이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금액 제한을 없애거나 낮은 수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화 중심에서 디지털 재화로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외시키고 있는 현행 규정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에스크로제 도입이 불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전자상거래에 에스크로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도의 활성화와 피해예방을 위해 에스크로제를 이용해줄 당부드린다. 안전한 거래를 하는 사이트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업자들도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경제]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배송 이후 교환 · 반품 · 환불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을”

황호연 이베이코리아 CE(Customer Experience)팀 차장

지난 7월 옥션과 G마켓이 합병 법인 ‘이베이코리아’로 정식 출범했다. 현재 옥션과 G마켓의 에스크로 기획과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황호연 차장을 만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다.



옥션과 G마켓은 언제부터 에스크로제를 시행했나?

옥션은 1998년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에스크로제를 도입했다. 옥션은 개인 간 거래로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들었다. 중고장터 등에서 개인끼리 거래를 하다 보니 서로 쉽게 믿을 수 없었고,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의심도 항상 존재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배송이 완료되면 고객이 확인하고 구매결정을 해주는 에스크로를 만들었다. 1999년 ‘구스닥’이란 업체명으로 시작한 G마켓도 초기부터 옥션과 비슷한 체계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행했다.

에스크로제의 운영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구매자가 물건을 주문, 결제하고 나면 그 돈이 G마켓이나 옥션의 계좌에 예치된다. 그리고 판매자가 주문을 확인하고 택배사를 통해 배송을 보낸다. 배송을 확인한 구매자가 ‘구매결정’ 버튼을 누르면 그때 판매자에게로 송금이 이뤄진다. 만약 배송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전산법 규정에 의해 8일차에 자동으로 송금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에스크로 운영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


개인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제3자가 결제금액을 보관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자인 만큼 우리가 제3자, 즉 에스크로 사업자가 된다. 때문에 보통의 쇼핑몰에서는 현금결제, 실시간 계좌이체를 할 때만 에스크로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옥션이나 G마켓에서는 모든 주문이 에스크로를 ‘탄다’고 할 수 있다.

에스크로제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가끔 예치금이 홀당될 때가 있다. 이미 배송이 됐는데도 구매자는 불량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물품의 하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판매자는 반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돈이 송금도 환불도 되지 못하고 계좌에 묶인다. 결국 6개월까지 중재를 하다가 송금이든 환불이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매우 곤란한 경우다.

제도와 관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점은?

비택배 상품(퀵서비스, 직접배송, 화물)에 대해서도 에스크로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줬으면 한다. 비택배 상품은 배송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송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반품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 여행상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가공식품 등 상품군별로 반품 규정이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 배송 이후의 교환, 반품, 환불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 단지 결제대금 예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이후의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완성형의 에스크로가 됐으면 한다. 

신지원 나라경제 인터넷기자

영세업체들이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에스크로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일종의 '사탁'(私託)의 성격을 갖는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양 당사자가 신뢰하는 제3자에게 맡기고, 매도인이 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한 것을 매수인이 확인한 후에 제3자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둘러싼 거래위험에 대한 완벽한 대응수단을 양자 공히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에스크로제를 평가해 보자면 전자상거래 영역 전반에서 널리 정착돼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에스크로제가 갖는 고유한 내재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이행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장점이 돋보이지만 합리적인 소비자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예 거래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중심축이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로 이동한 상태에서 오픈마켓이 제3자로서 에스크로 기능을 이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에스크로제의 확장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태생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구태여 개선을 요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에스크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크게 결여된 상대방과의 전자상거래에서 오히려 에스크로제가 자리 잡기 어렵다는 역설적인 환경에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 간의 '전자거래'에서 에스크로제 활용의 어려움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개인판매자야말로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판매자가 손쉽게 에스크로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사회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다. 또

한 에스크로제의 태생적 취약점인 에스크로 비용의 부담 문제이다. 신뢰가 안 가는 주체일수록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영세사업자나 개인판매자일수록 가격경쟁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므로 에스크로에 따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실을 회피하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세 전자상거래사업자나 개인판매자가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에스크로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널리 홍보해 선택케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하다.

에스크로제와 관련해 법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할 점도 존재한다. 에스크로제의 본질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이뤄졌음을 확인한 후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지급지시를 정지조건으로 해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됐음을 확인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지급지시를 할 현실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이행이 완전히 이뤄졌음을 합리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법리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거래계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8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디지털재화에도 에스크로제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중요한 선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문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indoh@yonsei.ac.kr

“손안에 유치원이 들어왔다”

APP

아 이폰을 두고 '퇴근 후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는 말을 한다. 부모들의 스마트폰이 집에서는 어린 자녀들의 독차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 흥미를 가지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들도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이하 앱)이 우후죽순 등장하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를 활용한 '뽀로로 첫 낱말놀이' 앱을 내놨다. 제작은 뽀로로의 기획사인 아이코닉스에서 맡았다. 원리는 간단하다. 화면에 등장하는 사진에 맞춰 단어가 등장하

고, 그 단어를 따라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말을 처음 배우는 어린 자녀에게 안성맞춤이다. 특히 음식, 숫자, 동물 등 카테고리별로 단어가 구성돼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아이들에게 '뽀통령'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뽀로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몰입도도 높다. 실제로 앱스토어에는 "아이가 지금 말문이 트는 시기라서 단어를 넘겨가면서 따라해요"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잇는다. 애플 앱스토어뿐 아니라 T스토어, 올레마켓, OZ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글뿐 아니라 영어와 한자를 배울 수 있는 앱도 있다. '어린이 영어' 앱은 '뽀로로 첫 낱말놀이' 앱과 동일한 원리다. 사진을 보며 영어 단어를 따라 읽을 수 있다. 숫자와 신체기관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유료로 결제하면 좀 더 많은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아이 한자박사'는 흥미를 유발하면서 한자를 배울 수 있는 앱이다.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리면서 한자를 익힐 수 있다. 앱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한자를 따라 읽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앱 역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한글과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알려주고 사물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용 앱 '뽀로로 첫 낱말놀이'(왼쪽). 3D로 만들어진 팝업북을 자유롭게 360도로 회전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늑대와 일곱 마리 양' 앱(오른쪽)

시 등장했다. '늑대와 일곱 마리 양' 앱이 대표적.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3D 팝업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동화책의 내용이 글자와 함께 음성으로 지원되는데, 3D 팝업북을 360도로 회전하면서 볼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터치하면 반응도 하기 때문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동화책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지며 볼 수 있는 동화책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유료지만 이벤트 기간을 활용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삼성출판사 스마트북스에서 내놓은 '인기 울동 동요' 앱도 주목할 만하다. 이 앱을 실행하면 캐릭터가 동요를 부르면서 울동을 하게 돼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구조다. 무료로 제공되는 동요를 내려받아 자신만의 저장공간에 담을 수도 있다. 좀 더 많은 동요를 내려받으려면 유료로 결제해야 한다. 동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동요앱은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유아용 앱들이 쏟아지면서 부모들도 비싼 교육용 교재구입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녀들이 너무 스마트폰에만 매달리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에만 매달리는 자녀들과 힘겨루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경제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gustn99@mt.co.kr

행복한 중소기업이란,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치는 곳. 『나라경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행복한 중소기업'을 소개한다.

그린산업으로 미래를 이끈다

(주)미래테크

풍력발전기용 '타워플랜지'(풍력발전기를 옮기기 위해 10m 정도씩 몸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데, 이 분리된 토막을 연결할 때 쓰는 부품)를 생산하는 (주)미래테크(경상남도 함안군 소재)는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강소기업이다. 2008년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후 이듬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매년 매출액의 6%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식경제부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핵심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자동동심장치 부문의 정부연구과제도 수행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미래테크는 차세대 산업동력인 풍력 분야를 주 사업영역으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오즐-'은 '오전에는 즐겁게 지내자'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미래테크만의 독특한 아침 인사다. 매일 아침 미래테크인들은 돌아가며 「31일 습관」이라는 책을 낭독하고, 9가지 종류의 박수를 치며 간단한 체조와 안마를 통해 서로 간의 교감을 높인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오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라는 인사로 업무를 마감한다. 비록 새내기 기업이지만 미래테크만의 문화는 벌써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할 수 있다는 '행복한 경영'을 꿈꾸는 미래테크. 매일 초 열리는 월례회의를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흐름, 업무진행 상황 등 작은 일에서부터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모두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개선한다. 또 인근 경로당에 후식으로 우유를 공급하고,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며, 내부교육에도 열성적이다. 규모는 작지만 미래테크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래테크는 지난해 중국 강소성 곤산시 장진기계유한공사와 수출계약 및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선박엔진부품 수출계약을 통해 연내 200만달러 수출계약을 맺고 앞으로 지속적인 무역확대로 2천만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해양레저장비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테크는 학력 수준과 개인의 능력보다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자세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중시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회사 내에서도 내부교육과 실습으로 충분히 이뤄지며, 인성이 갖춰졌다면 기술은 금방 습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경상남도의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회사나 개인이나 앞으로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꾸준한 학습능력을 갖추고 회사에서 마련한 성장프로세스에 발맞춰 3년, 5년 향후 10년 뒤의 자신의 모습까지 그릴 수 있는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면 미래테크에 한번 도전해 보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박원경



장 프랑수아 밀레(Jean Francois Millet)

이삭 줍는 여인들

필자가 처음 마주한 서양화는 밀레(1814~1875년)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었다. 이 걸작을 만난 장소는 미술관이 아닌 어린 시절 동네 이발소였다. 사각사각 이발사의 '바리깡'(이발기)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이발시간 내내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발소치고 밀레의 그림을 게시하지 않은 집은 없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본 그 작품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여전히 이발소 실내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줄무늬가 교차하는 실외 표지등과 함께 식발의식을 거행하는 '성소'의 중요한 상징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어쩌서 밀레의 그림들이 이발소의 벽면을 도배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밀레였을까? 사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발소는 다방, 목욕탕과 함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복합 문화·레저 공간이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선 뭔가 세련되고 색다른 그러면서도 손님들의 감성에 맞는 그림으로 실내를 장식할 필요가 있었다. 답은 밀레였다. 그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과 '만종'은 추수 후의 들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농부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 한국인의 정서와 상당한 합치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밀레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서였다. 당시 일본의 서양화단은 프랑스 유학 출신의 화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루소, 밀레를 비롯한 바르비종 화파(Barbizon School, 19세기 프랑스의 화파로 '바르비종'은 파리에서 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풍토틀

로 숲 속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다. 이들은 종전의 아틀리에 작업을 지양하고 직접 자연으로 나가 풍경을 그렸다)와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에 공명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농부의 삶을 목가적으로 묘사한 밀레가 환영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본고장 프랑스에서는 밀레의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밀레는 노르망디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나 오로지 자신의 재능 하나만으로 힘겹게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다행히 성직자들의 재정적 도움으로 파리의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에 진학할 수 있었고 1847년 뒤늦게 살롱전에 입상하면서 겨우 궁핍을 면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 이상적인 전원 풍경을 화폭에 담았으나 1849년 바르비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농부들의 열악한 현실에 눈뜨게 되고 이때부터 그들의 실상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묘사하기 시작한다. '이삭 줍는 여인들'은 바로 그러한 현실의식이 반영된 작품 중의 하나였다.

밀레는 이 작품을 1857년 살롱전에 출품했는데 비평가는 물론 대중들로부터 냉랭한 반응을 얻게 된다. 특히 상류층과 중산층은 이 작품이 하층 노동계급을 찬양하는 불순한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이 작품이 당시 만연하던 사회주의 운동과 관계가 있다며 목척을 높였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일까? 전통적으로 회화는 영웅적인 것, 혹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려야만 했다. 그런데 밀레는 당시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범한 농민들의 고단한 삶을 화폭에 옮겼기 때문이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은 밀레가 살던 바르비종의 샤이 인근



1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1857년, 캔버스에 유채, 84×112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2 장 프랑수아 밀레, 만중, 1857~59년, 캔버스에 유채, 84×112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농장을 배경으로 그려진 것으로 세 여인이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허리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착잡한 심사를 금치 못하게 하는 이 비참한 광경은 그러나 화가에 의해 경쾌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승화됐다. 이들의 모습 뒤에는 이제 막 수확을 마친 밀단이 수북이 쌓여 있어 세 여인의 빈곤과 대조를 이룬다. 밀단 오른쪽에는 노동자들이 밀타작에 열중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말 탄 토지소유자가 이들을 감시하고 있어 계층 간의 위화감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이 그림은 남성 중심사회에서 학대받고 있는 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둑이 제발 저러던 것일까? 당시 중산층 남성이 주축이었던 비평가 그룹과 미술애호가들은 이 그림을 보고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밀레 자신은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저 평생 고단한 노동으로 점철되는 농민의 삶을 묘사하는 한편 이를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

각은 '씨 뿌리는 사람', '만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특히 하루 일과를 끝낸 부부가 교회의 저녁 종소리에 맞춰 삼중기도를 올리고 있는 '만중'은 경건함을 넘어 숭고함마저 자아낸다.

우리가 그동안 전원의 목가적 풍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았던 밀레의 작품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지위를 상징하는 시대적 증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이 단순한 사회 고발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진한 서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힘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부의 삶이 곧 자기의 삶이기도 했던 작가 자신의 진정성 있는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 이발소에서 밀레의 그림을 보고 안도했던 것도 그와 유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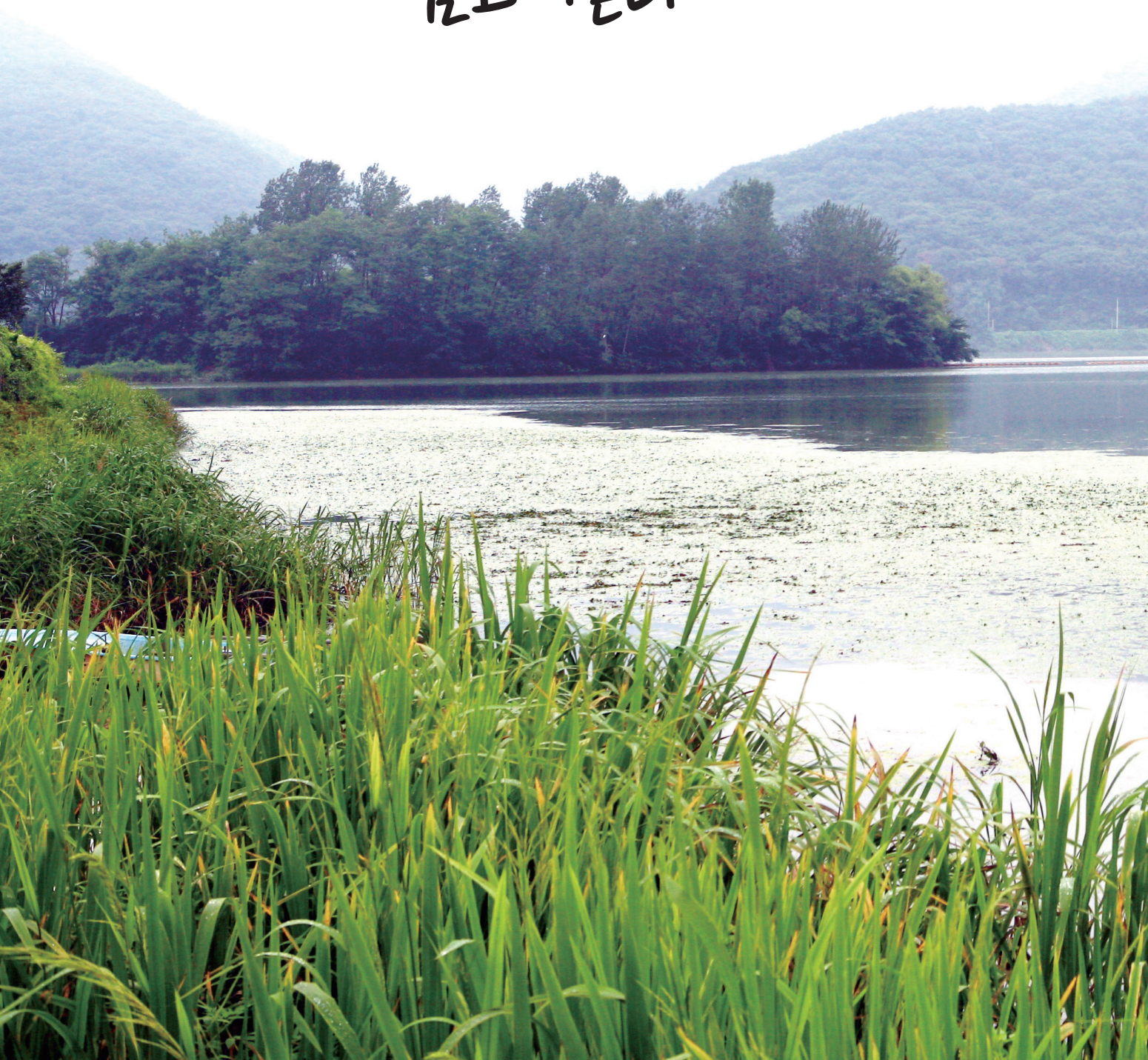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sukbum@naver.com

프랑스 파리대학 미술사학 박사. 저서로는 「어느 미술사가의 낭만적인 유럽문화기행」, 「아버지의 정편」 등이 있다.

눈 속에 강물을
담고 걷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남양주 두들머리 풍경



강 바람이 시원하다. 강물을 굽어보고 녹음을 우러르며 기찻길을 걷는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길. 서울 근교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남양주시에 최근 낭만적인 걷기 명소가 생겼다. 이름하여 다산길. 다산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강나루길(1코스), 다산길(2코스), 새소리명당길(3코스), 큰사랑산길(4코스), 문안산길(5코스), 마재고개길(6코스), 마치고개길(7코스), 사릉길(13코스) 등 8개 트레일 코스가 이미 만들어졌고, 물골안길(8코스), 축령산자락길(9코스), 거문고길(10코스), 수목원길(11코스), 옛성산길(12코스) 등 5개 코스도 현재 작업 중에 있다. 총길이 169.3km. 코스마다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7~8시간까지 걸리는 길이다.

다산길의 중심인 다산유적지에선 한강나루길과 다산길, 새소리명당길 등 3개의 철길 트레일 구간이 모이고 흩어진다. 세 구간(38km)은 강변을 끼고 있고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역시 2코스인 다산길. '다산유적지-연꽃단지-능내역-마재성지'를 거친 뒤 다시 다산유적지로 되돌아오는 이 코스는 길이 평탄해서 노약자도 즐길 수 있으며, 중간중간 쉼터와 전망대도 자리해 있다.

여름에는 연꽃 구경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길. 가을에는 철길에 핀 갈대와 물안개 낀 풍경이 아름답다. 걷다가 힘들면 중간중간 자리한 전망 데크와 원두막에서 다리쉬을 해도 좋고, 길의 질감을 느끼고 싶다면 군데군데 펼쳐진 평평한 흙길에서 맨발로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카페와 갤러리에 잠시 들러 목을 축이고 눈요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산길만의 장점이다. 그러나 역시 다산길의 가장 큰 매력은 걷는 내내 팔당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이라면 두물머리 인근에서 안개에 잠긴 황포돛배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



3



4

눈 속에 강물을 그렇그렇 담고 걷는 길. 강굽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산자락을 따라 가는 길. 기차길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길.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차길의 정취는 곧 사라질 전망이다. ‘팔당역-능내역’ 구간만 폐철 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철길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길이 남는 팔당역-능내역 구간도 철길만 그대로 둘 뿐, 바닥은 자전거 통행을 위해 포장공사를 한다고 한다. 바이크족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반가운 소식일지도 모르겠다. 남양주에서 양평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도 강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었을 것이다. 만일 아이들과 동행했다면 다산길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다산유적지와 실학박물관에 들러 선생의 실학사상을 체험하는 것을 권한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사상의 선구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생과 업적을 차근차근 둘러보면 저절로 역사공부가 된다.

이 밖에도 다산길 주변에는 다산이 즐겨 찾았다는 수종사(水鍾寺)도 자리해 있다. 조선 시대 서거정은 수종사를 일러 ‘해동 제일의 전망’이라고 했는데, 절에 올라서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안면 진중리에선 거미박물관과 생태수목원도 만날 수 있으며, 인근에 몽골의 역사와 생활, 생태, 전통음식, 전통가옥 ‘게르’ 등을 만날 수 있는 몽골문화촌도 있다. 내과 정계

1 다산길에는 곳곳에 들꽃들이 피어 있어 트레킹의 지루함을 달래준다. 2 팔당역과 다산길을 잇는 철교. 옛 철로에는 더 이상 열차가 다니지 않는다. 3 소화묘원에서 바라본 다산길 전경. 강 건너 양평이 지척이다. 4 새벽녘 다산길을 걸으면 이슬을 흥뻥 먹은 연꽃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5 다산길의 메카 다산유적지는 트레킹뿐만 아니라 역사교육과 견학지로도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글 이용한 작가 / 사진 이상현 작가

‘길 위의 시인’으로 지난 13년간 국내외 오지 혹은 섬을 떠돌며 글을 써왔다. 199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안녕, 후두둑 씨」, 「정신은 아프다, 여행에세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갈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바람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등을 펴냈다.



5



조원동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국공약(空約) 대 지역공약(恐約)

신 문지상에 각종 인기영합적인 정책 약속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것을 보니 또다시 선거철인 모양이다. 선거에서 정책 약속 공약은 필요악이다. 그러나 어떠한 공약은 ‘空約’이 되도 상관없고 어떠한 공약은 안 지키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恐約’이 되기도 한다.

MB정부의 최대 공약은 누가 뭐래도 ‘747’이었다. 매년 7% 성장을 통해 1인당 소득 4만달러, 7대 경제입국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찬 약속이었다. 이 정부 임기가 반을 훌쩍 넘었지만 ‘747’이 이 정부 임기 중 실현되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아무도 공약 못 지켰다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거니와 이를 탓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이를 지키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난리법석이 나곤 한다. 대통령이나 나서서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다. 약속은 약속이니 그대로 이행하라고 나라가 떠나갈 듯이 시끄러워진다.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왜 나라 전체로 보면 훨씬 중요한 전국공약은 空約이 되도 상관없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공약은 恐約이 돼야 할까? 답을 얻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구성원이 1만명인 사회에서 다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선택1>은 1만명 모두에게 1천원의 혜택을 준다. 즉 모든 구성원에게 1천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선택2>는 사회구성원의 일부인 100명에게 총 100만원의 혜택을 준다. 수혜층에겐 각 1만원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나머지 구성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제 사회구성원 각자의 의사결정 유인을 살펴보자. 수혜층의 선택은 당연히 <선택2>다. 이를 얻기 위해 각자 9천원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까지 있을 것이다. 비수혜층은 비록 <선택1>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각자 1천원만큼의 혜택을 얻기 위해 수혜층에 맞서 9천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까지 없을 것이다. 물론 수혜층이 <선택2>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총비용 90만원을 비수혜층 모두가 골고루 나눠 부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선택2>를 막아내는 비용을 비수혜층이 골고루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 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선택1>이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대안이라 하더라도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선택2>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수의 수혜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1인당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집행된다면 일부에만 혜택을 주지만 사회적으로 열악한 선택들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예외 없는 적용’이다. 예외가 있으면 <선택2>의 인기영합논리가 다시 통하게 될 테니까.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